15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 나라경제

nara.kdi.re.kr

2014 8

##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경제의 과제



**특집**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경제의 과제 **ISSUE** 힐링캠프 대한민국 **경제정책해설** 달러화 거치지 않고 원–위안화 직거래 /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 R&D사업의 업력 제한 없앤다 **특별기고**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학 소믈리에** 정책연구자가 바라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인사이트** 노후소득 보장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계는 지금** OECD: 민간의 환경혁신이 정부정책을 만났을 때 / EU: EU가 세계 최대 농식품 수출권이 된 비결은? **시평**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기획2014** WOMAN_여성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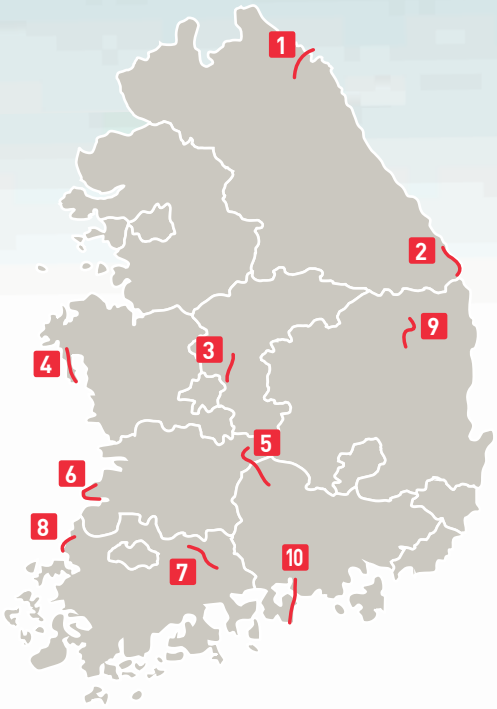
08
9 771227 803309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INFOGRAPHIC

# 떠나자, 달리기 좋은 국도 BEST 10

전국 51개 국도 중에 지역별로 경관이 아름답고 여름철 휴가지로 좋은 노선 베스트 10이 선정됐다. 유적지, 관광지 등 주변의 가볼 만한 여행명소도 고려해 선정된 만큼 아름다운 여름 휴가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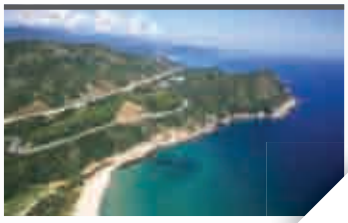



1 **삼림욕 절로 되는 산중도로, 국도 46호선** / 고성군 간성읍 홀리~간성읍 교동리
2 **머물고 싶은 해변도로, 국도 7호선** /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근덕면 궁촌리
3 **향수에 젖어보는 길, 국도 37호선** /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안내면 정방리
4 **안면송 솔향 그윽한 섬길, 국도 77호선** /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5 **구천동계곡 따라 가는 길, 국도 37호선**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6 **산과 바다를 한번에 느끼는 국도 30호선** /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변산면 대항리
7 **섬진강 물길따라 가는 길, 국도 17호선** / 구례군 황전면 비촌리~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 **해당화 피는 해안도로, 국도 77호선** /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백수읍 구수리
9 **청량산 운치에 취하는 산길, 국도 35호선**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법전면 소천리
10 **다리의 향연, 국도 3, 77호선** /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대교~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1 국도 46호선
여름날의 청정한 진부령 고갯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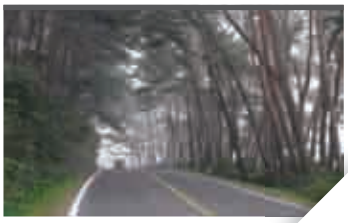
### 2 국도 7호선
용화해변의 옛날 7번 국도와 새 국도



### 3 국도 37호선
향수와 함께 금강 물줄기 따라가는 국도



### 4 국도 77호선
안면송이 가로수 구실을 하는 안면도 국도



### 5 국도 37호선
구천동 33경의 제1경인 나제통문 앞길



### 6 국도 30호선
산과 바다가 한곳에 어우러진 국도



### 7 국도 17호선
레일바이크 철길과 섬진강 중간을 달리는 국도



### 8 국도 77호선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백수해안도로 절경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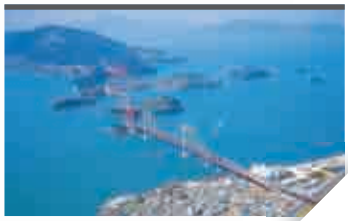
**9** 국도 3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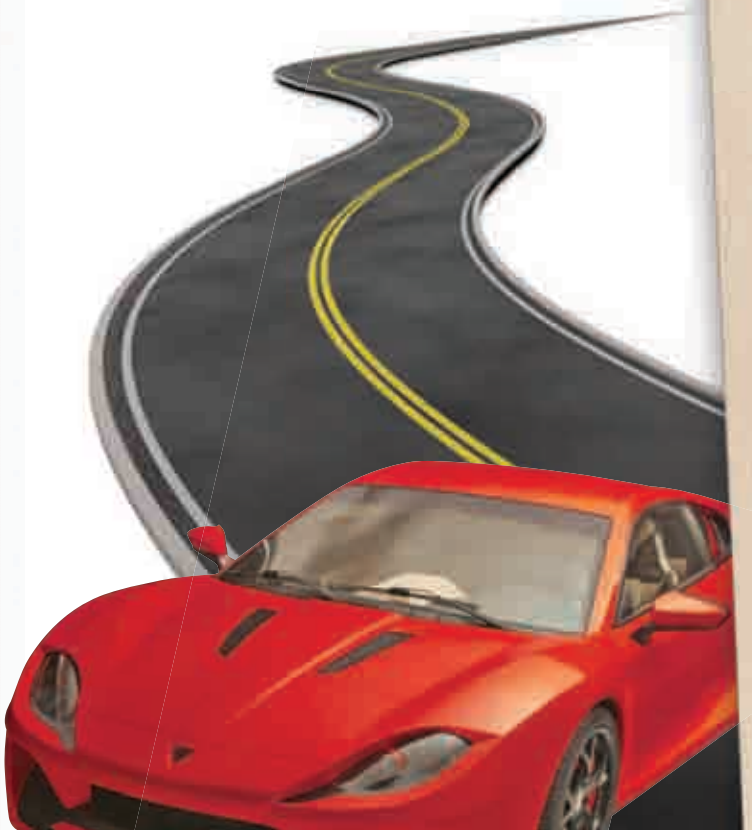
낙동강 물줄기 따라가는 깊은 산속의 국도



**10** 국도 3, 77호선

남해군에서 바라본 창선 · 삼천포대교 전경





# 우리나라 국민 **평균 국내여행 가계부**

지난해 우리 국민 중 **86.5%**가 국내여행을 즐겼다.

그중 **68.7%**는 당일여행,
**71.1%**는 숙박을 겸했다.

평균 **6.11**번 여행을 떠났고,
1년 동안 **10.3**일을 여행에 썼다.

## 국민 1인당 지난해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 구분 | 전체 | 숙박여행 | 당일여행 |
|---|---|---|---|
| 만 15세 이상 전 국민 | 531,576원 | 354,149원 | 177,428원 |
| 여행 경험자 | 614,664원 | 498,396원 | 258,401원 |

주: *여행 경험자는 전 국민 중 1회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지칭

## 여행 경험자 지난해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 전체 | 숙박여행 | 당일여행 |
|---|---|---|
| 109,751원 | 162,373원 | 59,484원 |

## 여행 경험자 지난해 1회 평균 항목별 지출액 비중

(단위 : %)

| 구분 | 관광여행 | 숙박여행 | 당일여행 |
|---|---|---|---|
| 여행상품 구입비 | 4.8 | 6.1 | 0.1 |
| 숙박비 | 14.6 | 18.7 | – |
| 교통비 | 24.4 | 22.9 | 29.9 |
| 식/음료비 | 35.4 | 33.3 | 42.6 |
| 문화/오락시설 이용료 및 관련용품 대여/구입비 | 7.3 | 6.1 | 11.6 |
| 스포츠/경기 관람 및 스포츠용품 대여/구입비 | 1.8 | 1.3 | 3.6 |
| 기념품 및 쇼핑비 | 8.5 | 8.2 | 9.6 |

주: *전체 국내여행 중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에 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 나라경제

2014 08 CONTENTS

나라경제는 KDI와 15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앱스토어에서 **나라경제**를 검색해 보세요!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경제의 과제**

**+**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이라는 세 번째 화살을 쏜 아베 총리와 유로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든 ECB 드라기 총재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까? 양적 완화 종료를 눈앞에 둔 미 Fed 옐런 의장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내수위축과 원고라는 악재를 만난 대한민국 제2기 경제팀은 '초이노믹스(Choinomics)'를 앞세워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동상이몽'에 빠진 세계경제. '각자도생'의 생생한 움직임을 『나라경제』가 포착했다.



book in BOOK

## 임신 · 출산 · 육아 · 보육 · 안전 등 여성 지원정책

진료비부터 철분제까지, 임산부라면 신청하세요!

기형아 걱정되면 임신부 약물상담 꼭 받으세요

13종 국가예방접종 무료…미숙아 등 신생아 지원 다양해

집으로 찾아와 1:1로 아이 돌봐…소득 따라 차등 지원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 둔 모든 가정에 지원

밤길 무섭다면? 귀가 도우미와 함께 들어가세요

## S SPECIAL THEME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경제의 과제


08 기대에 못 미치는 세계경제 회복세, 韓 성장률 3% 중 · 후반으로 뒷걸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10 양적완화 축소는 연내 마무리, 소비 주도에 의한 성장패턴 유지가 관건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12 민간소비 · 투자 증가세로 전환, 재정취약국의 '긴축 피로'는 아킬레스건
채희율 한국EU학회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14 성장률 7.5% 달성 무난할 듯…부동산 버블 · 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 상존
사동철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16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을 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18 아르헨티나 블루달러 위기설…신흥국 위기 재연 신호탄인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20 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내수 활성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I ISSUE

힐링캠프 대한민국


24 대한민국 구석구석 둘러볼 준비되셨나요?
장주영 매경닷컴 여행전문기자

25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하루 더!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26 충남 태안, 오붓하게 즐기는 해안국립공원
서영진 여행칼럼니스트

28 소백산자락길에서, 옛 선비와 교감하다
이선하 나라경제 기자

29 "휴가 덕에 대화 늘어 가족들의 만족도 높아졌죠"
안성무 주성엔지니어링 뉴비즈팀장

30 농촌은 뻔하다고? 각양각색 체험지로 변신 완료!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31 치유 너머 소망을 향한 여행
이종범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P 경제정책해설


34 달러화 거치지 않고 원–위안화 직거래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36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38 R&D사업의 업력 제한 없앤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40 中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 추진
박용규 환경부 환경산업과장

42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등 공정거래제도 개선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창조행정법무담당관

44 상시 감시 · 구조조정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할 것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W 세계는 지금


50 OECD: 민간의 환경혁신이 정부정책을 만났을 때
정선화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53 WTO: 일괄타결원칙의 덫에 걸린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승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56 EU: EU가 세계 최대 농식품 수출권이 된 비결은?
박상호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

59 미국경제: Anti-Banking Company '심플 은행'
나석권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S 특별기고


48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C COLUMN


02 INFOGRAPHIC
**떠나자, 달리기 좋은 국도 BEST 10**

22 언니의 수다
**아이, 꼭 외향적일 필요가 있나요?**
남인숙 에세이스트

32 경제학 소믈리에
**정책연구자가 바라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

46 변방의 집을 찾아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노근리 평화기념관**
최우용 건축가

62 生生 관가엿보기
**손 놓은 국회, 애타는 복지부**
박윤수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63 이인식의 과학세상
**청색경제 시대의 서막**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64 인사이트
**노후소득 보장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6 생각하는 광고
**8월의 크리스마스**
권현선 대홍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68 김세윤의 신작토크_〈동경가족〉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등'을 그리워하는 당신께 바칩니다**
김세윤 방송작가

70 시평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이메일: nara@kdi.re.kr
  전화: 044-550-4656
- **온라인입금계좌** 우리은행 254-012362-13-145(예금주: 한국개발연구원)

### 애독자 카드

더 좋은 잡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답변 내용은 앞으로 『나라경제』의 편집·기획방향을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애독자 카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차세트(사진)를 보내드립니다.



- **7월호**
  권현옥(서울시 양천구)
  문일현(광주시 남구)
  오인열(부산시 수영구)


**2014. 8** [제25권 8호 통권 285호]

| | |
|---|---|
|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
|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 **발행인** | 김준경 KDI 원장 |
| **편집인** | 최원목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br>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 **편집주간** |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
| **편집위원** | 기획재정부 윤정식 창조정책담당관<br>미래창조과학부 권현준 기획재정담당관<br>외교부 김선영 G20경제기구과장<br>안전행정부 서승우 재정정책과장<br>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창조행정담당관<br>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홍보담당관<br>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br>보건복지부 황승현 기획조정담당관<br>환경부 김승희 정책총괄과장<br>고용노동부 최현석 기획재정담당관<br>국토교통부 진현환 기획담당관<br>해양수산부 홍종욱 기획재정담당관<br>방송통신위원회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br>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과장<br>금융위원회 이수영 정책홍보팀장 |
| **편집간사** | 백종철 기획재정부 창조정책담당관실 |
| **편집장** | 이재열 |
| **취재·편집기자** | 유성임, 권기대, 표초희, 양은주, 이선하 |
| **배포** | 김경숙 |
| **발행처** | KDI 경제정보센터<br>(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br>ISSN 1227-8033 8 |
| **구독문의** | 044-550-4656 |
|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
| **e-mail** | nara@kdi.re.kr |
| **발행일** | 2014년 7월 31일(매월 말일 발행)<br>제25권 8호(통권 285호) |
|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
| **기사문의** | 044-550-4634 |
|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
| **제작지원·인쇄** | (주)성우애드컴 |
| **사진** | 이래스튜디오 |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andscapes:* *Seeking the Ideal Land*

# 산수화,
# 이상향을 꿈꾸다.



2014
7. 29. TUE
—
9. 28. SUN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국립중앙박물관

S

# SPECIAL THEME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이라는 세 번째 화살을 쏜 아베 총리와 유로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든 ECB 드라기 총재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까? 양적 완화 종료를 눈앞에 둔 미 Fed 옐런 의장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내수위축과 원고라는 악재를 만난 대한민국 제2기 경제팀은 '초이노믹스(Choinomics)'를 앞세워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동상이몽'에 빠진 세계경제.
'각자도생'의 생생한 움직임을 『나라경제』가 포착했다.

##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경제의 과제



# 기대에 못 미치는 세계경제 회복세
# 韓 성장률 3% 중 · 후반으로 뒷걸음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약간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며 세계경제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아시아 경제도 경착륙을 피하는 등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낮고 투자 지출은 여전히 활기를 잃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가 발표한『세계경제 전망』의 분석도 IMF와 대동소이하다.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정책,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개선, 재정긴축 기조 완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 둔화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3.6%에서 3.4%로 낮췄다.

### 돈줄 죄는 美, 금리 조기 인상론 시사

지난 6월 세계은행도 기존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 3.2%에서 0.4%p 하향 조정한 2.8%로 수정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무역적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은 1.4%에서 1.3%로, 개발도상국은 지난 1월 5.3%로 전망했던 것에 비해 0.5%p 떨어진 4.8%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유로존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2.9%까지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 저성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하 Fed)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베이지북(Beige Book; Fed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경제는 '보통에서 완만하게(modest to moderate)' 성장하고 있으며 강력한 소비지출과 제조업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엔 이상 한파와 재고 조정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분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개선됐고 경제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Fed는 양적완화책을 축소하며 통화신용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리 조기 인상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으로 뿌려오던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 디스인플레이션 우려하는 EU,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이와 같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으로 세계경제는 또다

〈표〉 2014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 기존 전망치 | 수정 전망치 |
|---|---|---|
| 기획재정부 | 4.1 | 3.7 |
| 한국은행 | 4.0 | 3.8 |
| 한국개발연구원 | 3.9 | 3.7 |
| 산업연구원 | 3.9 | 3.8 |
| 국회예산정책처 | 3.7 | 3.6 |
| 현대경제연구원 | 4.0 | 3.6 |
| LG경제연구원 | 3.9 | 3.6 |
| 한국금융연구원 | 4.2 | 4.1 |
| 한국경제연구원 | 3.5 | 3.4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내수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시 출렁이고 있다. 영란은행은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 EU는 지난 하반기부터 유로화 붕괴에 대한 악몽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을 우려해 이미 지난 6월 초 예금금리를 −0.1%까지 인하하는 부양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행도 양적완화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엔화 가치를 내리고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일본은 이제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세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린 상태.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의 여파를 벗어나고,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강력한 양적 · 질적완화 정책(QQE)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연 세 번째 화살이 정확히 과녁에 꽂힐지 아니면 세 번째 바늘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난 7월 16일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7.5%를 기록한 중국은 지난해 3분기 7.8% 성장 이후 7.7%, 7.4%로 이어지던 하락 추세에서 3분기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수출과 투자, 산업생산 등 세부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안정적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소매판매가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중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심리 위축 장기화, 통화가치 절상률 으뜸**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전망치 4.1%보다 0.4%p 떨어진 3.7%를 예상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한국금융연구원(4.2%→4.1%)을 제외하고 모두 4% 아래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0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로 0.2%p 내린 3.7%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말 전망치 4.0%에서 지난 6월 3.6%로 0.4%p 낮춰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 수정치를 제시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 · 외수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해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은 3.9%에서 3.6%로 0.3%p 낮췄다. 산업연구원(3.9%→3.8%), 국회예산정책처(3.7%→3.6%), 한국경제연구원(3.5%→3.4%) 등은 기존 전망치에서 0.1%p 떨어진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내수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외변수도 양적완화 경쟁을 벌이는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까지 더해 험난한 하반기 경제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2분기 말 원 · 달러 환율은 1,011.8원으로 1분기 말보다 52.9원 하락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5.2% 절상됐다. 지난 2분기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통화가치 절상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선진국 불황, 신흥국 호황의 모습은 2014년을 기점으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불황이란 모습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하나된 모습을 보였던 세계 각국이 올 초부터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는 이제 치열한 생존경쟁의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양적완화 축소는 연내 마무리 소비 주도에 의한 성장패턴 유지가 관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혹한과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기 2.6%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활동이 3월 전후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분기 이후 경기상승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문은 부채조정이 꾸준하게 진전되고 있다.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돼 개인소비 증가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도 2013년 말 이후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다소 침체됐지만 내수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GDP 성장률과 동조성이 큰 ISM 지수(미 공급관리자협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나타낸 지수로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는 2분기 55를 상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수 상황에 많이 좌우되는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6월에 95.0을 나타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향후 미국경제 특유의 소비 주도에 의한 성장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과 주택 등 자산가격의 상승은 소비 호조세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산효과의 지속은 가계 구매력이나 채무부담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경제 특유의 소비 주도에 의한 성장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과 주택 등 자산가격의 상승은 소비 호조세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 저임금 구조는 지속, 주택시장은 당분간 성장세 가속화 어려워

경기회복기에 진입한 2009년 7월 이후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2%대의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주택수요가 부진한 것은 2분기 이후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질적 개선 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노동수요가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slack) 과잉이 존재하고, 구조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저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는 6월 308만명으로, 2007년 평균 124만명에 비해 2.5배이며, 시간당 임금이 10~20달러대 업종의 고용 증가는 2007년 12월 수준을 초과한 반면 30달러대 고임금 업종의 일자리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계속 정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일자리는 2~6월까지 평균 20만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상승세가 본격화될 경우에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임금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기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hschoi@kcif.or.kr


대하고 있다.

전년 4분기에 이어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은 내재된 불안요인으로 인해 빠른 시간 내 성장세가 가속화되기 어려운 편이다. 우선 주택가격의 상승속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가 보유자는 자산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4월부터 주택착공건수 등 선행지표가 호전되기는 했으나 6월 신규 주택판매건수는 50만4천건으로 정점인 2005년 7월(138만9천건)과 비교하면 36.2%에 불과하다.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계속 이어지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도 예상돼 전년 4분기와 같이 주택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기상여건 등으로 보류된 잠재수요(pending demand)와 경기상승 등이 주택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경기 회복세가 급속도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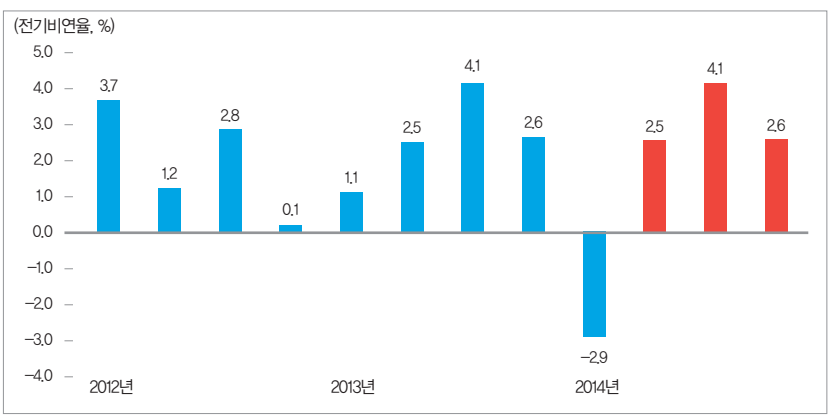
### 제로 금리정책 유지하면서 금리인상 시점 모색

주요 IB를 비롯한 분석기관들은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산매입(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축소가 계속되면서 10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QE3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옐런 Fed(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FOMC에서 중시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체되고 있고, 최초 기준금리 인상이나 Fed의 보유자산 축소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시장과의 대화(선제적 지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을 감안하면 향후 출구전략의 주요 시나리오는 양적완화 종료 이후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감안해 실질적인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인상 시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Fed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시점 등 구체적인 출구전략 구사 여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매입 축소가 마무리되는 연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금리는 지난해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나 해외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 출구전략 논의의 본격화, 금리인상 시기의 가시화 등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자산가격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해외경제의 성장여력 약화, 구체적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 문제가 확산될 경우 수출 침체를 통해 미국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자산가격의 조정은 우크라이나, 이라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격화에 따른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주가는 기업실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Fed가 금융완화에서 긴축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유입된 사상 최대의 신용잔고는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주가 폭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이다. 이처럼 주식 하락은 역(−)의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와 실물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고용 축소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소비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미국 실질 GDP 성장률 및 전망치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 2014년 2분기 이후 붉은색 전망치는 블룸버그 전망치

# 민간소비 · 투자 증가세로 전환, 재정취약국의 '긴축 피로'는 아킬레스건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해 EU와 IMF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일랜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키프로스 등이 이른바 트로이카(EU · ECB ·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EU경제가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유럽연합의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를 일컫는 말)과 EU는 뚜렷하게 경기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EU 28개국 중 13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 2분기부터 경기 흐름이 전환되면서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10개국으로 줄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개선됐다.

### 2015년 경기회복세 더욱 강화 … 2.0% 성장률 예상

2013년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한 것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데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EU 수출은 2010년 이래 유럽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엔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 절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개선 추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는데, 특히 스페인 · 포르투갈 등 재정취약국에서 수년간 이어졌던 소비급락세가 멈췄다는 점이 주목된다. 민간설비투자의 경우 2008년 이래 급락하면서 EU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으나 최근 불확실성 완화와 자금조달 조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 이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EU의 경기회복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키프로스와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유로존은 1.2%, 그리고 EU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유로존과 EU가 각각 1.7%와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세계경제의 전반적 개선에 따라 EU의 역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개선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회복세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용과 가처분소득의 미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도 내수가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더욱 해소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자본시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상반기에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전향적인 통화정책 방향으로 선회한 2012년 하반기 이래 근 2년간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 5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예치금리를 0%에서 -0.1%로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ECB 본부에서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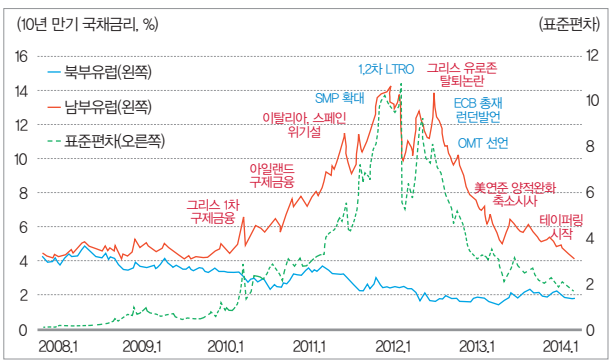


**채희율**

한국EU학회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hychai@kyonggi.ac.kr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 간 국채수익률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그림〉 참조). 이러한 시장 여건 개선에 힘입어 아일랜드 · 포르투갈 · 스페인 등은 더 이상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않고 2012~2013년 중 자체적으로 국채발행에 성공했으며, 2014년 4월 그리스도 5년 만기 국채발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실물과 금융 양 부문에서 EU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별로 볼 때 편차가 크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림〉 EU 국채금리 추이




자료: 강유덕, 「재정위기 이후 유럽취약국의 경제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EU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문, 2014. 6. 25

### 재정취약국의 부실대출 비중 증가는 내수회복 걸림돌

국가별로 볼 때 영국 · 독일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은 내수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경기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외부에 있는 영국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등에 힘입어 EU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과 2011년 4%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지난 2년간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내수와 수출 양 부문에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높은 조세부담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소비자심리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취약국의 경우 노동비용 하락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과 긴축재정의 지속으로 인해 내수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하며 경기회복도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취약국은 그동안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축소시기로의 진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속적인 긴축재정은 내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긴축 피로'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와 극좌파가 약진한 것은 긴축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피로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정취약국의 내수 위축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2014년 4월 그리스 · 키프로스 · 슬로바키아 · 포르투갈 등 4개국은 마이너스, 그리고 스페인 · 아일랜드 · 이탈리아는 0.3~0.5%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5월 ECB가 정책금리를 0.15%로 인하하고 시중은행의 하루짜리 ECB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한 것은 이러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EU경제의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건전성 문제다. 재정취약국에서 총대출 중 부실대출 비중은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은행의 부실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일시적 불안을 초래한 것에서 볼 수 있듯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은행 파산은 국제적으로 유로존 리스크를 부각시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규모를 줄이고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EU 내수회복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CB가 실시하는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자본확충 규모에도 주목해야 한다. 올 11월 단일감독기구 출범에 앞서 ECB가 EU 역내 은행에 대해 실시하는 자산실사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확충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은행들은 6개월 내지 9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자본확충을 해야 하며, 이에 실패하는 경우 강제적인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ECB가 적극적인 자산매입 등 대응조치를 하게 되면 충격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EU 은행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 성장률 7.5% 달성 무난할 듯…
# 부동산 버블 · 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 상존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연속해서 경기하강세를 보였던 중국경제가 반등으로 전환하면서 연초 제기된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7.5% 성장률은 전분기 성장률 7.4%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 7.4%를 소폭 상회한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 전체로는 7.4% 성장률을 보이면서 정부의 목표성장률 7.5%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4월 이후 시행한 소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정책효과가 2분기 경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에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정부는 4월을 기점으로 중서부 지역 철도건설 추진, 도시 낙후시설 개발, 자본시장 개방, 농촌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선별적인 지준율 인하 확대 등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위치한 철강업체의 작업현장

### '리커창지수' 5월부터 완만하게 상승

미세조정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요 실물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해 시장 예상치 17.2%를 상회했고 5월까지의 누계실적(17.2%)에 비해서도 소폭 개선됐다. 특히 인프라 투자에서 비중이 큰 철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중국 정부가 철도투자를 위해 연초 설정한 연간 투자금액 6,300억위안을 3차 조정을 통해 8천억위안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월 산업생산도 9.2%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월 8.8%에 이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산업 분야와 국유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 기인한다.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더디지만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약세에 힘입어 2개월 연속 7%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6월 수출은 7.2% 증가해 5월 7.0%보다 상승했고 3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매판매는 6월에 전년동월 대비 12.4% 증가해 5월 12.5%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1분기 12.0%를 소폭 웃도는 12.3%를 기록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실물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전력사용량, 은행대출잔액, 철도화물 운송량을 활용한다고 해서 명명된 소위 '리커창지수(Li Keqiang Index;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2007년 중국의 경제흐름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지표에서 비롯된 경제지수)'도 5월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



**사동철**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dsa@posri.re.kr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부양책효과 등으로 2월 50.2를 저점으로 6월에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인 51.0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도 부양책의 시차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진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수준도 2%대에서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현재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기호전으로 대외 수요가 개선되고 위안화 절하(환율 상승)효과까지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출도 향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투자은행)들은 수출통계 과다 계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0.9%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7.5% 내외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글로벌 IB들은 최근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안 증폭, 디폴트 기업 늘어나

향후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완화됐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둔화세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우려요인이다.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 시 내수시장 침체와 함께 금융 부문으로 전이돼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55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도시지역의 주택 5채 가운데 1채 이상이 비어 있다고 보도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급락 시 경제 충격이 크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3-4선 도시(중국의 경제 ·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도시는 1-2선 도시라 칭하며 3-4선 도시는 공업화 · 도시화 · 토지개발 등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지방 소도시를 의미)의 도시화 추진과 함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을 통한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은 낮아 경착륙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관련 금융리스크의 재부각은 하반기 경제성장의 또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최초의 태양광업체 상하이 차오르(超日)솔라와 철강업체 하이신강철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가 만기가 도래한 단기채의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고 공시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환경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회사채 만기가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관련 리스크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 8~12월 중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 규모 535억위안은 지난해 전체와 올해 1~7월 합계인 215억위안의 두 배를 상회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4조2천억달러로 미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 13조1천억달러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부패척결, 국유기업 개혁, 과잉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경기하강 압력이 강해져 경기부양 시에는 개혁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반기와 같이 소규모 경기 활성화시책 등 미세조정(fine tuning)을 취할 것이다. 2분기 성장률 반등과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상당한 파장을 가져오는 테일리스크(tail risk)가 상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기업 경영자와의 좌담회에서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을 쏘다

아베노믹스는 '2년 이내, 2% 물가상승률 달성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집권기간 내 3%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12년 12월 아베내각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6월 지난해 발표한 성장전략의 개정판을 발표함으로써 세 번째 화살의 '결정판'을 쏘게 된 셈이다.

**양적완화, 기대 인플레이션과 주가 끌어올리는 데 성공**

지난해 1년 동안 엔 · 달러 환율을 80엔대에서 100엔대로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일본의 양적완화는 장기국채 등 자산매입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연간 60~70조엔, 2013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아베내각이 강조했던 것처럼 2011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권에서 맴돌던 시장(market)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2%대 중반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부터는 플러스대로 전환됐고 지난 4월엔 소비세율 인상과 겹쳐 3% 중반대로 상승했다. 일본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질곡처럼 인식했던 엔고와 디플레이션에서 드디어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효과는 주가지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도쿄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2012년 말부터 양적완화가 초래할 엔화약세를 예상한 외국인투자자의 일본주식 매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15조엔에 가까운 외국인투자자 순매수에 힘입어 닛케이 225 지수는 연초 11,000대에서 연말에는 16,000대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도 초반엔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15,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4월 소비세 인상을 감안하면 1분기 GDP 갭이 0.6%로 약 6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은 일본경제가 과잉공급 상태에서 벗어날 징조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난 6월 24일 아베 일본 총리는 경제정책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 외국인과 여성의 취업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놓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keiokim@kiep.go.kr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물 부문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엔 · 달러 환율과 유사했던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 1년간 일본의 수출수량지수는 90.2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도 아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일본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본재 수출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지만 전기 ·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하락한 일본 제조업이 엔화약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본 내 양적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만으로도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을 인상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나, 당장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임금 수준을 보면 양적완화의 파급효과가 실물 부문으로까지 확산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20여년 동안 일본의 국내 설비투자 실적을 보면 1997년 78조3천억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09년에는 62조4천억엔으로까지 급감했으며 아베노믹스를 본격화한 2013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1.6% 감소한 64조7천억엔을 기록했다.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10년 5조엔을 밑돌았던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11년, 2012년에는 10조엔 수준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13조엔까지 증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임금 쪽을 살펴봐도 지난해 일본 정부와 경제단체연합회가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언론들은 임금인상 사례를 적극 홍보했지만, 실제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월 기본급여액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29만5,700엔에 그쳤다. 기업들이 기본급여보다는 성과급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어 소비진작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재정건전화와 역행하는 아베노믹스, 실물 부문 파급효과는 미온적**

아베노믹스가 실물 부문에서 효과를 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장전략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진행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 메가 FTA 추진이 눈에 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전략특구를 여섯 곳 지정한 것이나 기업 단위로 규제완화를 허용해 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한 것, 그리고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장전략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더욱 확대된 일본 기업의 해외이전에 제동을 걸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려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장전략이 2015년까지 연간 70조엔을 목표로 내건 점을 감안하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법인세 인하나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노동력 활용도 제고와 같은 조치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더 긴 안목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전면 수정해 외국노동력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과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TPP 협상을 조기 타결해 대외개방을 서두르는 방안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OECD와 IMF는 2014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1.2~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이보다 약간 높은 1.4%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1.5%였음을 감안하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는 지난 4월 단행된 소비세 인상이 일시적이긴 하나 경기냉각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난 1997년의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30%를 넘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확대를 꾀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소화에 자신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재정건전화와 역행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내년에는 소비세를 예정대로 10%로 인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베노믹스는 세 번째 화살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은 두 번째 화살이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진정으로 성공하느냐 여부는 재정건전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아르헨티나 블루달러 위기설…
# 신흥국 위기 재연 신호탄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신흥국과 PIGS(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등) 위기 경험국 문제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급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블루달러(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위기설과 포르투갈 최대 은행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BES)의 기술적 채무불이행 사태가 대표적 예다. 때맞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닛 옐런 의장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계기로 신흥국에서는 각종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급격한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르헨 · 남아공 · 터키, 외환위기 가능성 높아

급격한 자금이탈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며, 이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는 또 다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이른바 나선형 악순환 위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주요국의 경험적 사례를 보면 급격한 자금이탈은 대부분 외환위기, 금융위기 또는 국가채무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로 발전된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급격한 자금이탈은 특정 국가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로 설명하는 시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형성될 경우 자본흐름이 역전되면서 급격한 자금이탈과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인접국가로 전염된다고 봤다. 태생적 한계(original sin)를 갖고 있는 신흥국 금융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이 이론의 시각에 따라 파악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아르헨티나도 이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외자이탈을 경험한 국가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CDS 프리미엄과 해외자본 유출입, 환율 움직임과의 관계를 보면 CDS 프리미엄이 장기 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외자유입이 감소된다. 변동성이 더 심해져 장기 평균치에서 4배를 벗어나면 CDS 프리미엄이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비슷한 시점에서 외자순유입 규모도 장기 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 이상 감소하는 이른바 '급격한 이탈단계'에 진입한다. 이때부터 위기 발생국의 통화가치는 절하되기 시작한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당시에는 절상되다가 해외자본 유입이 갑자기 중단되면 곧바로 대량 이탈로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갈수록 국제 간 자금흐름이 투기적 속성이 강한 자금에 의해 주도돼 환율 변동성이 심해진다. 특히 위기 발생국들의 외화유동성에 의심이 갈 경우 투기성 자본들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지원 등과 같은 계기가 마련되기까지 혼란 국면이 지속된다. 이 단계에선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통화표시 자금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이탈이 발생하면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외화부족에 직면한다. 그 후 주가와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와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지(부채축소 · 저축제고),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대차대조표 효과 등을 통해 비교적 큰 폭의 실물경기 침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에 적용해 보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각 국가별로 커다란 차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을 계기로 자금이탈이 발생할 경우 가장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밑돌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폭이 큰 국가들이다. 하지만 한국 · 중국 등은 같은 신흥국에 속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영향을 받는 심리적 충격 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금리인상 등 FRB의 출구전략 추진 시 이탈한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중위험 ·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은 이들 국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7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2단계 강등했다. 사진은 발표 하루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증권거래소

### 한 · 중은 상대적으로 안전…
### 아르헨 위기 과대 해석 금물

이론적으로 '급격한 자금이탈'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전적 혹은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외국자본 유입과 유출 규제다. 또 다른 하나는 유입국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보하거나 운용수익 등 외환보유액 활용능력 제고, 외화건전성 규제 등이다. 급격한 자금이탈 대응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한 기존연구를 종합해 보면 신흥국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왔던 외국자본 유입규제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보다 훨씬 앞서가는 고도의 파생금융기법이 발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급격한 자금이탈 대응방안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은 1990년대 이후 중남미와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흥국들이 외부요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 안전장치로 가장 중시되고 있다. 연구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10억달러 증가하면 이들 국가들이 위기를 겪을 확률이 평균 50bp(basis point;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를 의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액 등 위기지표를 토대로 앞으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흥국별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검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외환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high crisis countries)는 외환보유고에 비해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심한 아르헨티나 · 남아공 · 태국 · 터키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나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국가(middle crisis countries)는 적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는 쌓아 놓고 있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브라질 · 러시아 · 체코 · 인도 · 멕시코 등이다.

이와 달리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출구전략이 추진될 경우 기회요인이 더 많을 수 있는 국가(low crisis countries)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 놓고 있는 한국 · 중국 등이다. 우리 입장에선 아르헨티나 블루달러 위기설 등을 과대해석해 위기를 조장하는 '인포 데믹(info-demic; 정보 전염)'과 '리스크 데믹(risk-demic; 위험 전염)' 현상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 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내수 활성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 성장궤도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률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히 부진한 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중기(2013~2015년) 목표치 2.5~3.5%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 부진은 자본재 · 원자재 · 소비재 등의 수입을 부진하게 만들어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시키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640억달러에 달했는데 올해도 700억달러 안팎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흑자 누적은 원화가치 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채산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은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단기 · 중기 대책은 물론 장기적 시야의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해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가 재기하느냐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국면에 빠지느냐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부동산거래 활성화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높여야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으로 구성되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 1분기 0.3%(전기비)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1.3%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0~201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6.7%, 올 1분기에는 4.8%로 증가율이 회복됐으나 이는 장기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진은 국민경제상의 저축–투자 갭을 확대시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누적은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내수를 활성화해 저축–투자 갭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축소시켜 원화절상 압력을 줄여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쉽다.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가구업계,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체, 중개업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kuohn@ssu.ac.kr

소 등의 형편을 개선시키는 등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상향 조정한 이후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기업이 사내유보를 투자로 돌리고 배당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불합리한 준조세 개선 등도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국내투자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춰 금융정책을 완화기조로

정부는 그동안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정책 카드를 써왔다. 상반기에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집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4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천억원(세입 결손 보전용 12조원+세출 증대용 5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됐고, 올해도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을 7조8천억원가량 끌어다 썼다. 그러나 재정정책만으로는 소기의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정책과 함께 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뤄질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제 GDP(국내총생산)가 잠재 GDP를 밑돌아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착해 금리인상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감이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춰 금융정책을 완화기조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과 금융 모두 완화정책을 쓰면 저물가와 저성장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체감경기 개선과 원화강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재정정책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위험도가 높은 자산까지도 매입함으로써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언제까지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

### 경제 역동성 저해하는 한계기업 정리 중요해

국내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 4.6%에 그쳤으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0%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00% 미만인 외부감사 대상기업 비중이 2009년 말 10.2%에서 2012년 말 15.0%로 크게 높아졌다. 한계기업(부실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놓인 기업)수는 2009년 말 2,019개에서 2012년 말 2,965개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2009년 12.5% → 2013년 19.4%)이 제조업(2009년 7.6% → 2013년 9.8%)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 · 화학 · 철강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으며, 비제조업은 건설업 · 부동산업 · 운수업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업 · 건설업의 한계기업수가 994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33.5%를 차지했다. 한계기업은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유도해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바 있으나 근래에 올수록 산업 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부진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온존하는 한계기업수가 증가하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제도도 기업의 우열을 가리는 방향에서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경기가 악화됐을 때 기업의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처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언니의 수다

# 아이, 꼭 외향적일 필요가 있나요?

**남인숙** 소설가, 에세이스트
insook200@daum.net

2004년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로 독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공감을 얻은 베스트셀러 작가. 최근엔 「나는 무작정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를 내놨다.





많지 않은 나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시작했던 저는 늘 서툰 엄마였습니다. 그래도 크게 후회는 없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걸 저 스스로와 아이 모두에게 납득시키려 애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를 되짚어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달리 내향적인 성격을 타고난 아이를 미숙하게 대했던 저의 태도입니다.

딸은 낯선 사람은 물론, 웬만큼 낯이 익은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도 어색한 어른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눈을 감고 아예 자는 척을 할 정도였으니 그저 평범한 아이의 수줍음이라기에는 도를 넘는 부분이 있었지요. 양가 어르신들은 붙임성 없는 아이의 성격에 걱정이 많으셨고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사람들을 접해도 아이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귀엽다며 다가오는 지인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끼지 말았어야 할 감정으로 아이를 대했지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딸이 부끄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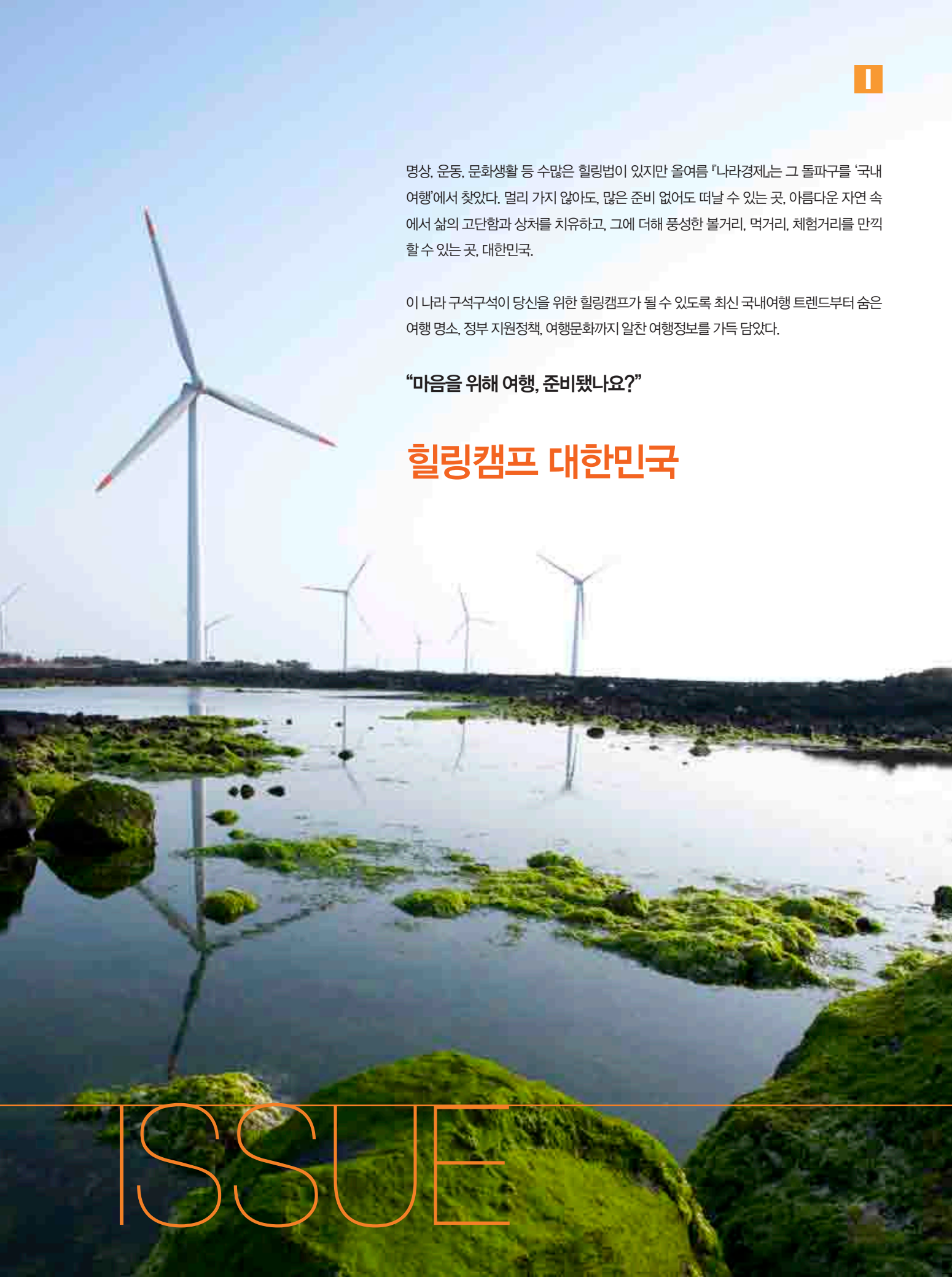
그간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또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를 해온 저는 이제 딸을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건 그저 아이의 성격일 뿐이었는데요. 사람이 타고난 여러 성격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내성적인 성격을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스무 살 때까지 엄마에게 떼를 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적으로 굴지 못하는 어린 딸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게 어른이 되면서 저절로 나아지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제 딸의 미래를 걱정했던 걸 보면, 내향성이란 필히 고쳐야 할 성격상의 흠결로 오해되는 게 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성적인 이들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일터에서도 무능하며 불필요한 손해를 보며 살게 된다는 염려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80퍼센트 이상이 내향적인 성격을 타고난다는 한국 사람들, 적어도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으며 잘 살고 있지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는 내향적 인간들은 차분히 집중해야 하는 일을 잘 해냅니다. 심지어 외향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영업직에서도 조용한 신뢰로 큰 성공을 이뤄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아가 잘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본성을 적당히 거슬러 필요한 만큼 외향적 태도를 보이는 게 대부분이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내성적이었던 딸은 이제 갓 중학생이 됐지만 벌써 필요한 만큼은 본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이나 어른들 누구를 대할 때에도 제법 사교적이며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내향적 인간답게 남을 고즈넉이 관찰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어른스러움이 엿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본성을 간직하면서도 그에 맞게 생존하는 법을 터득 중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누구에게나 밝고 힘찬 모습을 보여라.'라면서 본성을 거스른 외향성을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타고난 성격은 유전입니다. 아이가 내향적이라면 그 성격을 물려준 건 여러분이지요. 애달아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믿고 기다려 주자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만들어낼 인품의 힘이 성격을 압도하도록 말입니다.

〈언니의 수다〉는 작가 남인숙이 워킹맘을 비롯해 정신없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잠깐의 여유, 작은 충고와 소통 노하우들을 나눠주는 공간이다.



명상, 운동, 문화생활 등 수많은 힐링법이 있지만 올여름 『나라경제』는 그 돌파구를 '국내여행'에서 찾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많은 준비 없어도 떠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삶의 고단함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 더해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이 나라 구석구석이 당신을 위한 힐링캠프가 될 수 있도록 최신 국내여행 트렌드부터 숨은 여행 명소, 정부 지원정책, 여행문화까지 알찬 여행정보를 가득 담았다.

**"마음을 위해 여행, 준비됐나요?"**

# 힐링캠프 대한민국

ISSUE

장주영
매경닷컴 여행전문기자
semiangel@mk.c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둘러볼 준비되셨나요?



충북 단양지역 유명 관광지를 찾아 도장(스탬프)을 찍는 '스탬프 투어'가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가족여행을 준비 중인 40대 직장인 이상훈 씨는 보다 알찬 일정을 짜기 위해 고민이다. 모처럼 찾아온 휴가를 단순히 바다냐 산이냐로 끝낼 수 없는 법. 여행의 자유로움과 함께 교육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정을 계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 지난해 결혼한 최연호 · 윤소현 부부는 다가오는 가을에 국내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벌써 준비에 한창이다. 인터넷에서 여행정보를 취합해 일정을 짜는 것은 최 씨가, 아내 윤 씨는 숙박이나 먹거리 등을 담당해 윤곽을 잡고 있다.

바야흐로 여행이 대세인 계절이 돌아왔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체휴무제가 실시되는 데다 유난히 공휴일과 이어지는 날도 많아 이른바 황금연휴를 즐기기에 딱 좋은 기회다. 국내 여행업계도 조심스레 여행객 마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동안 휴지기를 보낸 업계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행객들의 관심끌기에 나섰다.

최근 가족단위 여행객들은 백화점 둘러보듯 관광하는 것을 지양하는 추세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관광을 선호하는 탓에 농어촌 및 한옥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대거 개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00여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벗 삼아 실제 농가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삭막한 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오이나 가지, 고추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고 그것을 요리해 먹는 과정이나 낙농가에서 우유를 직접 짜는 체험은 살아 있는 교육효과를 거두는 데 으뜸이다.

여행의 재미를 배가시킨 코스도 등장했다. 서울, 부산, 경주, 군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고 인증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다. 군산의 경우 근대역사박물관, 새만금방조제, 발산리 5층 석탑 등 12곳의 지역 명소를 방문해 확인도장을 받으면 나중에 군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 같은 스탬프 투어는 이동하는 재미에 스치듯 흘러갈 명소를 알게 되는 교육적 효과까지 있어 두루 사랑을 받고 있다.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먹거리를 아예 전면에 내세운 식도락 여행도 인기다. 대구는 납작만두, 누른국수, 뭉티기, 복어불고기 등 대구를 대표하는 10가지 음식을 여행코스로 정해 입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 밖에 마을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통영 동피랑길이나 청주 수암동길, 화가 이중섭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귀포 유토피아길 등은 걸으며 세상을 마주하는 이색 골목투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 이제 이 표현은 누군가와 이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여행을 떠날 때 써야 안성맞춤이란 생각이다.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싶다면 과감히 짐을 꾸려라. 당신의 뒷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울 테니 말이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jinstar@korea.kr



#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하루 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쉴 수 있는 휴가철이 왔다. 올해 국민 100명 중 55명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82.9%가 국내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86.5%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냈고, 총 3억8,900만일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국내여행이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의 관광시장은 국내관광이 주도(일본 95%, 미국 88%)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국내관광 비중이 60%로 낮아 외부충격의 영향이 크고, 국내관광산업의 투자가 저조한 데다 비수기에 경영이 악화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7년까지 국내관광 시장규모 30조원 달성(2013년 기준 약 24조원), 관광산업 경쟁력 15위 달성(2013년 기준 25위)을 목표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된 국내관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 하반기 국내관광 회복 및 활성화 방안'을 실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내관광 수요를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관광기금의 특별 · 정기융자 등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소중한 사람과 하루 휴가 더 가기 캠페인'은 치유여행을 홍보하고 사랑하는 반쪽, 아이, 친구에게 하고 싶던 말을 전할 수 있는 여행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경제계를 대상으로 휴가사용 동참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휴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어 9월 관광주간(9월 25일~10월 5일)에는 '가을추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맞춤형 여행코스를 제안하고, 할인과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을철 국내관광 수요 점화의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1천명 이하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운영해 국내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현재도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 외에 교황 방한(8월 14~18일)과 연계해 서울 · 충남 도보 순례길 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7월 중에는 새로운 한국관광 브랜드 선포와 함께 '한국관광의 별' 시상을 통해 국내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신규 관광전용열차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철도관광 기반을 확충한다. 자전거 · 걷기 · 인라인 · 캠핑 등 레저 ·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콘텐츠의 내실화도 꾀하고 있다.

올 여름휴가로 총 3조8,520억원의 관광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는 6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2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연평균 여행일수가 하루 증가하면 2조5천억원의 소비가 창출되고,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국내관광 캠페인으로 2.7일의 휴가가 증가해 129억원의 에너지가 절감됐다.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은 국민행복, 문화융성, 침체된 내수경제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덧붙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다. 관광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독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관광은 전 사회의 영역과 연계돼 있는 융복합 산업이다. 국내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콘텐츠 내실화의 노력은 외래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 충남 태안, 오붓하게 즐기는 해안국립공원

충남 태안은 바다 체험여행의 보고다. 해안국립공원을 옆에 끼고 진한 바다향기를 곳곳에서 맡을 수 있다. 가족과 함께라면 신두리 해수욕장 옆 신두리 사구를 놓치지 않는다. 한적한 신두리 사구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바닷가 모래언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해당화, 갯메꽃, 갯완두, 모래지치 등 각종 갯벌식물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흥미로운 모래언덕을 거닐었다면 개성만점 해변 구경에 나설 차례다. 태안읍에서 603번 지방도를 따라 만대포구로 달리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숲으로 덮인 오지 해변이었던 꾸지나무골은 길도 한적하고 물도 없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외진 모래사장이었다. 뽕잎의 대용인 꾸지나무잎으로 누에를 치던 곳이 지금은 송림을 병풍삼은 고요한 해수욕장이 됐다. 꾸지나무골 인근엔 걷고 싶은 길인 솔숲길이 조성돼 솔향기 따라 오붓한 해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서영진
여행칼럼니스트
aularge@daum.net



꾸지나무골 남쪽의 사목, 구름포, 방주골 등은 인적이 뜸한 조용한 해변들이다. 사목 해수욕장은 소들이 해변에서 풀을 뜯을 정도로 고즈넉하며 해변에 아늑한 펜션이 자리 잡아 이국적인 풍취를 더한다. 통개 해수욕장은 여름이면 붕장어구이를 먹기 위해 미식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해수욕장 가는 길은 옹기종기 들어선 수목원들만 아울러 둘러봐도 신이 난다.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의 천리포 수목원은 1만3천여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다 2009년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호랑가시나무 370여종, 목련 400여종, 동백나무 380여종 등이 집중적으로 식재돼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증받고 있다.

태안 안흥항 신진도 일대는 국내 바다낚시의 아지트다. 전국의 낚시꾼들은 배를 빌려 타고 가의도 너머 낚시 포인트로 질주하며 포구에는 주말이면 방파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찬다. 신진도 앞바다에는 가의도, 옹도, 난도, 격렬비열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가지런하게 늘어서 있다. 이 섬들 사이에서 대구, 광어, 우럭 등 팔뚝만한 생선들이 입질을 한다.

방파제 낚시는 가족 나들이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진도 너머 하얀 등대가 있는 마도는 1년 내내 물고기가 많이 잡혀 갯바위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낚시터다. 신진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인근 앞바다를 둘러보는 체험도 흥미롭다. 사자바위, 독립문바위 등 태안 앞바다의 기암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태안에서는 리아스식 해변 위를 나는 스릴 넘치는 항공체험 역시 마음을 들뜨게 한다. 안면도 일대의 초경량 비행기는 경험이 없는 가족들도 안전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는데 만 6세 이상이면 간단한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탑승이 가능하다. 안면도 체험비행의 경우 뭍에서만 봤던 꽃지 · 샛별 해수욕장과 안면도 휴양림, 방포 해변 등이 창공에서 내려다보인다.

태안 나들이 때 전통 해변체험을 곁들이는 것은 꼬마들에게 특별한 해변의 추억이 될 듯하다. 남면 별주부 마을에서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체험이 가능하며 이원면 볏가리 마을에서는 염전체험, 갯벌체험으로 풍요로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포도송이 같은 태안의 해변들은 안면도 영목항 최남단까지 이어지며 신비로운 모양새를 갖춘다. 두여, 밧개, 샛별, 바람아래 등 오붓한 해수욕장으로 연결돼 살가운 여름해변의 정취를 더한다. (사진 제공: 서영진)



태안 갯벌체험



천리포 수목원



마도 등대 낚시

**TIP~!** 태안의 대표적 휴식처인 안면도 휴양림은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서어나무 등 안면도 특유의 수종도 함께 분포하고 있다. 소나무 군락 뒤편으로는 숲속의 집들이 가지런히 들어서 있다. 태안의 맛은 이원면 일대의 밀국낙지탕이 유명하다. 인근 해안에서 잡히는 이곳 낙지는 한입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특징. 낙지와 함께 밀국(칼국수)을 넣고 끓이면 면발에 시원한 국물이 배어 쫄깃쫄깃한 맛을 낸다.

# 소백산자락길에서, 옛 선비와 교감하다



영화 〈동감〉이 떠올랐다. 경북 영주시 죽계천을 끼고 걷는 소백산자락길을 반나절 거닐고 난 후였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인(유지태 분)이 1979년에 사는 소은(김하늘 분)과 우연히 무선통신으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2014년의 기자는 죽계구곡(竹溪九曲)의 한가로운 아름다움 앞에서 500년 전 옛 선비들과 교감했다.

소백산 자락을 한 바퀴 감아 도는 소백산자락길은 모두 열두 자락으로 구성돼 있다. 기자가 찾은 첫 자락은 소수서원, 선비촌 등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선비길, 죽계구곡을 감상하며 걷는 구곡길, 잣나무 숲과 산촌마을을 볼 수 있는 달밭길로 이어진다. 총거리 12.6km.

시원한 계곡에 빨리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에 구곡길이 시작되는 배점분교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했다. 배점분교 옆으로는 겨울철새인 원앙이 많이 찾는다는 배점호수가 잔잔하게 보였고, 좀 더 올라가니 죽계천의 모습이 나타났다. 죽계천은 고려시대의 경기체가 〈죽계별곡〉의 배경이자 퇴계 이황, 주세붕, 신필하 등 유현(儒賢)들이 명명한 죽계구곡이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향촌에 은거하면서 산수가 아름다운 아홉 굽이에 이름을 붙이고 구곡시를 남겼다고 하는데, 죽계구곡은 그 같은 구곡문화의 현장이다. 구곡길은 푸른 나무들로 빼곡한 숲과 예부터 수없이 이곳을 지나쳤을 사람들의 발길로 고와진 흙길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기대감을 안고 죽계구곡 하류에서 시작되는 9곡부터 1곡까지 발길을 옮겼다. 사과농사가 주업인 지역이라 그런지 9곡 근처에는 사과밭이 가득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 계곡으로 내려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굽이굽이 자연의 순리대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는 더운 여름날의 피로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2곡 부근에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하기 전 초막을 짓고 지냈다는 초암사도 있었다.

초암사를 좌측으로 끼고 돌아가니 소백산의 숨은 비경, 달밭길에 접어들었다. '달'은 원래 산의 고어다. 그러니까 달밭은 산의 경사진 면에 다닥다닥 붙은 작은 밭들을 의미한다. 달밭길은 길을 따라 나무들이 아치형 터널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하늘 높이 쭉쭉 뻗은 잣나무 숲이 펼쳐지기도 했다. 배용호 소백산자락길 위원장은 소백산이 한라산 다음으로 식물분포가 다양한 산이라고 설명했다. "소백산은 냉대와 온대의 구분 산맥인데다 남쪽엔 화강암 지질, 북쪽엔 석회암 지질이라 경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생태자원도 풍부한 거죠."

소백산자락길의 매력에 취해 걷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시원하고 담백한 육수가 일품인 메밀묵밥으로 속을 채우고 이번에는 첫 자락의 시작점인 소수서원으로 향했다. 학문을 강론하던 강학당은 겹처마에 팔각지붕으로 엄숙하다.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학구재와 지락재는 교수의 숙소인 직방재와 일신재보다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스승을 높이는 유교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라고 배 위원장은 말했다. 소수서원과 맞닿아 있는 선비촌에서는 전통한옥 숙박체험도 가능하다.

소백산자락길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받았다. 그만큼 각 자락마다 다양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 올여름, 소백산 자락에서 옛 선비들의 감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맑은 계곡 물속을 첨벙거리는 소박한 선비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 **이선하** 나라경제 기자

**TIP~!**

– 코스 · 숙박 정보: 소백산자락길 홈페이지(www.sanjarak.or.kr)
– 문의 : 소백산자락길(054-633-5636), 영주시청 관광산업과(054-639-6603)

# “휴가 덕에 대화 늘어 가족들의 만족도 높아졌죠”

**안성무** 주성엔지니어링 뉴비즈팀장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이래 외산장비 일색이던 국내 반도체장비시장에 뛰어들어 토종장비를 만들며 굳건히 자리를 굳혔다. 올 1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해 전 직원의 30%가량이 지원을 받게 됐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나?**

사내 복지담당자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올해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들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부담해 총 40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일반카드처럼 쓰고 여행을 다녀와서 사용한 만큼 정산하는 구조다.

**어디로, 어떻게 휴가를 다녀왔나.**

5월엔 강원도 정선, 6월엔 양양에 다녀왔다. 휴가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정된 40만 포인트를 다 쓸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짰다. 우리 가족은 숙박비와 워터파크 이용에 다 썼다. 기본적으로 국내여행에 필요한 숙박비, 관광시설 이용비 등에만 쓸 수 있다.

**휴가비지원을 신청할 때 조건은 없나?**

우선, 휴가비지원을 받을 근로자수만큼 회사가 정부에 신청해야 하던데 사내 복지담당자께서 부지런하신 것 같다(웃음). 최근 경기도 어렵고 기업상황도 안 좋고 하니 사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없을까 찾던 중에 이 사업을 발견한 것 같다. 지난해 11월쯤 직원들에게 이 사업을 공지해 신청자를 받았고 수혜기업으로 결정된 뒤에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 직원 입장에서 별다른 신청기준은 없었고 급여에서 20만원을 공제해 40만원의 휴가비 종잣돈을 미리 만든 거다.

**그럼 휴가비지원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

그렇다. 미리 휴가비를 확보하니 계획을 세우는 데 속도가 붙더라. 확실히 경비부담이 줄어든 게 촉진제가 됐다.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 같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도 늘어나고 관심도 많아지니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 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자로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전체적인 이용에 큰 불편은 없었다. 그런데 문화부가 인정한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만 이용 가능해서 해당 지역의 영세한 곳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더라.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 편의시설 담당자가 잘 모르더라. 이용자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제공자들의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또 숙박비 위주로만 쓰게 되는데 여행 가보면 식비가 제일 많이 든다.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해주면 좋겠다.

**주변에 추천할 만한지, 내년에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사용하고 싶은데, 좀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수준의 56% 정도다.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꾀하려 한다면 예산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도의 취지와 대상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는 분명 성과로 반영된다. 더 많은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할 수 있게 이 사업이 포지셔닝됐으면 좋겠다.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농촌은 뻔하다고? 각양각색 체험지로 변신 완료!

**강원도 횡성 고라데이마을**



심마니체험

"심 봤다~ 심 봤다~~"

어린 심마니의 우렁찬 외침소리에 조선시대 민복 차림을 한 촌장이 달려가 삼을 확인하고 그의 행운을 축하한다. 화전민들이 심마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애환을 듣고 4인 1조로 팀을 이뤄 시작한 심마니체험 30분 만의 일이다. 산삼을 찾지 못한 다른 심마니들은 입맛을 다시며, 더워진 가슴을 다슬기와 버들치 잡기로 식힌다.

이번엔 물푸레나무로 윷 만들기. 단단한 성질의 물푸레나무는 이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예전엔 도끼자루로 활용되던 것이지만 가벼운 데다 청명한 소리가 나 윷에 적격이다. 아이들은 윷을 만들고 윷판놓기를 즐기며 우리의 전통놀이를 절로 익힌다.

해가 저물면 아이들은 캐놓은 감자를 흐르는 물에 씻고 호일에 싸서 나무움막으로 들어앉는다. 잔불에 감자가 익어가는 동안 친구들과 평소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 꿈을 다시 쓰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엔 화전민들이 살았던 민가를 찾아간다. 아흔을 바라보는 화전민 할머니의 육성을 통해 다 쓰러져가는 화전민가에서의 생활을 상상해본다. 1박 2일간의 농촌여행은 이렇듯 짧기만 하다.

행정명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봉황이 우는 마을이라지만 순박하고 꾸밈없는 이곳 사람들의 특징을 따 '골짜기'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 '고라데이'마을이라고 불린다. 이곳에서는 앞서 소개한 대로 화전민들의 독특한 삶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스토리와 의상 등이 곁들여져 있는 데다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수십 가지나 되니 알음알음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5천원에서 1만원에 불과해 체험자들의 만족이 더 높아진다.

마을 체험관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재명 촌장은 이곳의 자랑으로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을 꼽았다.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체험과 휴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있다. 체험 없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달빛걷기를 할 수도 있고, 황토구들방에서 원기를 얻고 갈 수도 있다." 더불어 그는 2012년 7월 '팜파티(farm-party)'를 만들었다. "도시에서 오는 이들이 대부분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가는 게 아쉬웠다. 기왕이면 농민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농산물도 주고받고 해야 친해지지 않겠나." 그는 1년에 한 번뿐이지만 매년 7월 팜파티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모든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농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운동회와 공연, 바비큐 파티를 마련한단다. 고라데이마을이 그저 경치 좋은 산골이 아닌 내 이웃이 사는 마을로 거듭나는 것이다(올해 팜파티 '고라데이 오는데이'는 7월 26일이었다).

이 촌장은 "1년 내내 어느 때 단 한 가족이 이곳을 찾더라도 농촌의 정서를 느끼고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두 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최근 경기 가평 아홉마지기 마을, 경남 거창 솔향기돌담마을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여름철 휴가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3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이종범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jb6547@hanmail.net



# 치유 너머 소망을 향한 여행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처지라 역사탐방에 자주 초대받는다. 한참 전 전북 부안을 돌았을 때였다. 정유재란 때 고장을 지키고자 일어섰다가 주검마저 거두지 못한 선비를 기리는 비석의 문구는 뭉클했다. "당신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다." 그래도 탐방단은 아전의 딸로 태어난 부안 명기 이매창(1573~1610년)이 한때의 정인을 떠나보내고 읊었다는 시조를 웅얼대며 오붓했다. "이화우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

고창군 성송면 어느 마을, 한 비석의 사연은 아련했다. 주인공은 한말 어지러운 세상 실국광민(失國狂民)을 자처하다가 면암 최익현이 1906년 늦봄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선포하자 따랐다가 순창에서 순절한 정시해(鄭時海). 그때 일행 중의 독백, "이 비석으로 들판이 문득 훤하다." 망국의 세월,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 유생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빛을 읽었던 태연한 언사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의 탐방은 정녕 빛을 찾아가는 관광(觀光, Light-seeing)이었다.

관광은 '주역'의 '관국지광(觀國之光)'에서 나왔다. 옛적 나라의 빛은 임금의 왕궁, 왕경의 번화함이었던지라 벼슬하려고 과거보러 가면 관광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빛, 나라의 빛은 우리의 삶과 놀이, 말과 노래, 일터와 쉼터, 생태와 자연에 있다. 정시해와 같은 순국선열의 희생조차 빛이다.

그런데 오늘날 관광은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보기(Sight-seeing)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더구나 자아와 풍경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더욱 아쉽다. 최근 역사교훈여행으로 번역되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즉 '재난 현장이나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은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 유대인 대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수용소, 수백만명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9.11 테러의 그라운드 제로 등이 유명한데 전쟁과 학살에 대한 성찰, 화해와 치유를 희망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대문형무소가 돋보이지만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전주 인근 '아름다운 순례길' 그리고 광주 '오월길' 등도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은 도처에 있다. 20세기 우리 겨레가 자주독립운동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과 성취만큼이나 앙금과 상흔 또한 어둠에 가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은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 장구한 중화문명체제에서 고유문명을 지켜내고 발전시킨 우리 겨레의 흔적 또한 겨레의 빛을 뿜어내는 현장이다. 바로 사찰과 서원, 누정과 정려, 비석과 무덤, 그리고 크고 작은 박물관일진대 이러한 장소를 찾아가며 시간의 무게가 비추는 빛을 만난다면 현실의 좌절과 상흔마저 치유 너머 소망으로 환생하지 않을까. 오가는 피서지 주위에서 찾아가거나 요즘 주목받는 농촌체험여행이나 자원봉사여행의 틈새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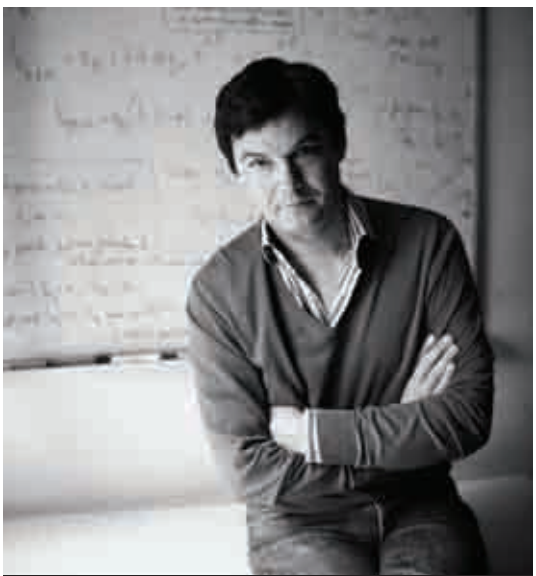
이제 여행도 풍경 너머 보이지 않는 저편을 꼼꼼히 살펴가며 '함께' 하는 겨레의 빛을 찾아갈 때가 됐다. 서로의 응어리,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사찰과 서원, 누정과 정려, 비석과 무덤을 찾아가며 시간의 무게가 비추는 빛을 만난다면, 현실의 좌절과 상흔마저 치유 너머 소망으로 환생하지 않을까. 사진은 전라북도 부안군 개암사

# 정책연구자가 바라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열풍이 거세다. 지난해 말 불어판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이 출간됐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광풍은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영어판이 출간되고 미국 민주당의 정책어젠다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이슈를 일으키며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다. 피케티 열풍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아직 한국어판이 출간되진 않았지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21세기 자본론」은 크게 보면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책의 말미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 이른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정책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보고서의 구성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책연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에게 「21세기 자본론」의 제목을 다시 정해보라고 했다면 '소득 및 부의 집중: 현황과 전망' 정도로 했을 것 같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정책보고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책 당국에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 19세기 말 '도금시대'에 근접한 소득 · 부의 집중 심화

먼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21세기 자본론」은 소득 특히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이른바 제2의 도금시대(Gilded Age)가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도금시대는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고 1873년에 시작돼 불황이 오는 1893년까지 미국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28년간의 시기를 지칭한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찰스 두들리 워너가 쓴 동명의 소설 「도금시대, 오늘날 이야기(The Gilded Age: A Tale of Today)」에서 유래한 용어다. 이 시대에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광산왕 구겐하임 등 이름난 부호가 등장했다. 국가의 비호를 받은 독점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하층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소득 및 부의 분배가 매우 나쁜 시기였다. 피케티는 20세기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소득과 부의 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소득분배가 이른바 쿠즈네츠의 역 U자형 모양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정도를 지나면 개선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소득 및 자본의 분배는 상위 1% 혹은 0.1%에 다시 집중되고 있고 그 정도는 19세기 말 도금시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소득 및 자본의 분포가 상위그룹에 집중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물론 *Financial Times*의 가일즈(Giles) 같은 경우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케티는 영국의 경우 상속 자료를 이용해 부의 집중도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 genoswoo@gmail.co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중요한경제문제연구소 소장



계산했는데 좀 더 신뢰성 있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의 집중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 숫자도 시계열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부의 집중이 가속화된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입맛에 맞는 자료만을 선별해 쓴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 지구적 부유세' 도입하면 자본 집중 완화할 수 있을까?**

전망 부분에서 피케티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경제모형에 기초해 설명했다. 우선 두 개의 기본법칙을 도출했다. 제1법칙은 거시경제 수준에서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r x k)/y로 규정하고 있다(r: 자본의 수익률, k: 자본, y: 소득). 법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의에 가깝다. 제2법칙은 장기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비중이 일정한 규모로 수렴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즉 k/y = s/g(s: 순저축률, g: 성장률)로 앞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합하면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r x k)/y = r x (s/g)가 된다.

여기까지는 간단명료한 수학적 도출의 결과다. 하지만 여느 경제모형이 그러하듯이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전망 부분은 몇 가지 강한 가정을 전제로 도출되고 있다. 「21세기 자본론」에서 피케티가 하고 있는 주요한 가정은 자본수익률 r과 저축률 s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장률 g가 작아지게 되면서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하락하면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가 된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은 합리적 가정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전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 추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망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 예컨대 자본수익률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축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자본수익률이 일정한 상황에서 자본소득이 늘기 위해선 자본이 늘어나야 하고 자본이 늘어나기 위해선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가 늘기 위해선 저축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만큼 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기 위해선 소득의 상당 부분을 경제 주체들이 저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저축률의 상승은 가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기조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는 우리나라처럼 저축률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정과 모순이 된다.

더 나아가 자본의 집중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늘어난 자본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갈 것이라는 예측도 쉽지만은 않다. 자본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세습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재벌이 다음 세대로 부를 세습하는 경우에 형제 간 경쟁을 통해서 부가 쪼개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1세기 자본론」이 내놓고 있는 향후 소득 혹은 부의 집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동의하기 어렵다.

「21세기 자본론」은 이런 현황과 전망에 기초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자본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전 지구적 부유세(global wealth tax)'를 제안했다. 여기서 부유세란 자산에 대한 과세지만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같이 자산가치를 과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채 부분은 공제한 순부유세의 개념이다. 다만, 자본은 쉽게 세금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조해 과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유세를 통해 자본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자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유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생애주기 동안 납부한 순부유세를 상속 시 공제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도 분명하진 않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엄밀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화(寓話)이기 때문에 우화가 주는 교훈을 잘 배우면 되지 비현실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부유세의 경우도 현실에서의 과세 가능성 여부보다도 현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에서 봐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 달러화 거치지 않고 원–위안화 직거래

##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한 · 중 정상회담 합의 성과

중국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 영국 · 싱가포르 등 각국은 금융 분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역외허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 역외허브는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 집적지를 의미한다. 즉 위안화로 무역결제뿐 아니라 자금조달, 신용거래, 투자 및 헤지 등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위안화 역외허브로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기존 달러화 결제에 익숙한 기업의 거래관행, 축적된 위안화의 투자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위안화 표시 거래가 부진한 상황도 목격했다. 특히 기업들의 달러화 위주 거래관행으로 인해 위안화 거래수요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위안화 관련 인프라 발전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책적 돌파구(breakthrough) 모색이 긴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지난 수개월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韓에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지난 7월 3일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금융 · 통화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



지난 7월 3일 열린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금융 · 통화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에 합의했다. 같은 날 청와대 세종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한 · 중 확대정상회담 모습

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은행 간 시장에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거래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원화를 위안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이 달러화를 다시 홍콩 등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돼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한 · 중 간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위안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환위험 헤지뿐 아니라 환전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둘째,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 청산이란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위안화 청산은행이란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실시간 결제시스템(CNAPS)과 연결돼 역외 위안화 거래 결제대금의 청산 ·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까지는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없어 홍콩의 청산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결제해 왔으나, 이 경우 결제목적의 위안화를 홍콩에 충분히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위안화 자산 축적이 불리했다. 이번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됨으로써 국내에 위안화 예금 등 자산이 축적돼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콩 내 청산은행을 통할 때보다 결제단계가 간단해져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고,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0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 부여**

셋째, 중국 정부는 한국에 800억위안(약 13조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부여했다. RQFII는 중국 정부가 국가별 · 기관별로 할당한 금액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역외의 위안화를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 당국은 홍콩(2,700억위안), 대만(1천억위안), 영국(800억위안), 프랑스(800억위안), 싱가포르(500억위안), 한국(800억위안) 등 총 6개국에 6,600억위안의 쿼터를 부여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향후 RQFII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RQFII를 통해 중국 역내의 투자처가 확보될 경우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높아져 위안화 표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됐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양측은 한국 당국 · 금융기관이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했다. QFII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안화가 아닌 외화를 통해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다. 2014년 5월 말 현재 중국 당국은 전 세계 중앙은행 · 금융기관에 배정한 약 560억달러 중 한국에는 총 38억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관에 대한 QFII 한도의 증액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두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현재 국내 제도상으로도 가능하나, 중국계 기업이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합의는 향후 중국 정부가 중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채권 발행은 국내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위안화 보유수요를 높이며, 채권 발행 확대를 계기로 위안화 주식 · 파생상품 등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번 한 · 중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패키지로 일괄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한 · 중 간 금융 · 통화 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양국 간 밀접한 경제관계, 높은 문화적 · 인적 교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합의된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발족했다. 앞으로 T/F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위안화 청산은행의 운영 개시, 개별기관의 RQFII 한도 획득,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등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jychoi70@mosf.go.kr

#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 알뜰폰 활성화 방안

2011년 7월 통신 3사(KT · SKT · LG U+) 경쟁구조가 고착화된 이동전화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알뜰폰 제도가 도입됐다. 알뜰폰이란 주파수와 무선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로부터 서비스를 도매(wholesale)로 구입한 후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소매(retail)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도입 당시 4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은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 간 경쟁에 힘입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2%인 34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3G · 4G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시장진입 희망, 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 간 갈등, 시장 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재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는 6% 수준에 불과해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3,839만에 달하는 3G · 4G 스마트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정부는 올해의 망 이용대가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정액상품(예: LTE 520 요금제는 월 5만2천원을 지불하고 음성 250분, 데이터 2.5GB, SMS 250건을 사용)을 도매로 제공받아 판매한 후 판매수익의 일정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익배분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대 50%(알뜰폰)에서 45% 대 55%(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 구간)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져 알뜰폰 시장이 3G · 4G 스마트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 통신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요금제 출시

KCT, CJ헬로비전 등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40여종의 3G · LTE 정액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하므로 1인당 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SK텔링크(SKT 자회사), KTIS(KT 계열사),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 등 이

〈표〉 이통사와 알뜰폰 상품비교

| 구분 | 기존 이통사 | 알뜰폰 사업자 | 이통사 대비 |
|---|---|---|---|
| 음성 180분, 데이터 1.6GB | SKT 'LTE-42'<br>기본료 42,000원<br>(24개월 약정 시 31,500원) | KCT 'USIM LTE 26'<br>기본료 25,200원<br>(무약정, 무위약금) | 40% ↓<br>(약정가입자와 비교 시 20% ↓) |
| 음성 200분, 데이터 1.5GB | KT 'LTE-420'<br>기본료 42,000원<br>(24개월 약정 시 31,000원) | CJHV '조건 없는 USIM LTE 21'<br>기본료 21,000원<br>(무약정, 무위약금) | 50% ↓<br>(약정가입자와 비교 시 32% ↓) |
| 음성 망외 140분, 데이터 1.4GB | LG U+ 'LTE 망내 42'<br>기본료 42,000원<br>(24개월 약정 시 31,500원) | 미디어로그 '망내 USIM LTE 21'<br>기본료 21,000원<br>(무약정, 무위약금) | 50% ↓<br>(약정가입자와 비교 시 33% ↓) |

통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진출과 관련해선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자회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의 전이, 자회사 부당 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 자회사들에 대해 ①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 의무 ②모기업의 직원 ·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 ③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 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50% 제한의 경우 이미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점유율(2014년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4%)을 고려하면 3개의 이통 자회사들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까지만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이통 자회사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시장규모를 제공해 주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알뜰폰 판매 우체국 600여개로 확대

신뢰성 있는 온 ·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가 알뜰폰 서비스의 신뢰성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7월까지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 · 면 우체국 포함 600여개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방문 ·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이통 3사의 유통망이 부족한 농어촌까지 이용자 접점이 확대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돼 신규로 출시되는 3G · 4G 정액 요금제에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우체국을 찾은 한 시민이 알뜰폰 가입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유통망 확대와 함께 알뜰폰의 지속 성장에 따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가칭)'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및 해지, 요금설정 및 보조금 지급, A/S, 개인정보보호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일반 국민들의 알뜰폰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G · 3G 피처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 · 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돼 이용자의 통신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도매대가 · 단말기조달 · 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즉 이통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도매대가 추가 인하, 우체국 등 판매망 추가 확대 등을 제시한 만큼 이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알뜰폰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jileesanlove@hanmail.net

# R&D사업의 업력 제한 없앤다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우리나라의 R&D투자 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5위, GDP 대비로는 4.36%로 전년도 2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R&D 경쟁력, 연구개발 생산성 등 질적 성과는 미국 · EU ·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모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R&D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1위였다가 2012년, 2013년 각각 16위와 17위로 밀려났으며, 제조업 기술 수준도 미국 100을 기준으로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는 2014년 초 산업기술정책 리뷰에서 우리 R&D 생산성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PD(Program Director) 중심의 과제기획으로 인해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신규과제 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 · 평가가 부족하고, 중간 · 최종 평가 간 일관성 및 사업화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권고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산업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R&D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 산업기술 R&D 3조2,500억원 수준… 인건비 비중 27.7%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R&D현황 및 개선할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3년 산업기술 R&D는 3조2,500억원 수준이고 8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 중심(63%)으로 투자되고 있다.

첫째, 예산 항목별로는 전체 R&D투자금액 중 시설 · 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는 27.7%에 불과해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2011년 기준 4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수행 주체별로는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을 중소기업에는 75% 이하, 대기업에는 50% 이하 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과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국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초 · 선도연구의 정부지원 비중은 높게, 개



지난 7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나노융합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탄소섬유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발 · 실증연구는 낮게 차등화하고 있다.

셋째, 과제 유형별로는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와 민간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이분화돼 있는데, 과제신청 단계부터 50~100페이지 분량의 상세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과제기획에 대한 유연성 및 도전성을 저해하는 등 'R&D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과제기획 단계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기술 5개년계획과 연구개발사업화(R&BD) 전략에 주로 의존하며, 민간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미흡하다.

다섯째, 과제선정 단계에서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풀(2만3천명) 중 자동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해 평가하고 있으나, 1시간 내에 발표와 평가가 모두 이뤄져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부족하다.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경우 수 주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과제수행 단계에서 책임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매 단계별로 평가자가 달라져 과제 이해도 및 일관성이 떨어진다.

### 품목지정형 과제 2017년까지 30% 수준 확대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미국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①R&D 기획 단계를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②과제선정 및 평가 단계를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게 ③과제수행 단계를 보다 수요자 지향적으로 ④성과관리를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성과창출 및 확산형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첫째, 품목지정형 과제를 201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Request for Proposal)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기획과 사업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과 같이 정부는 지원하는 품목만 공고하고 과제신청자가 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을 제시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4페이지 이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하고, 내실 있는 과제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며, 과제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과제신청자가 가장 전문가임을 감안해 신청자 상호 간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R&D 인건비 비중을 27.7% 수준에서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버금가는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 · 중견기업이 신규 R&D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두뇌기업, 제조SW 등 지식서비스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연구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R&D 종합컨설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서류 · 정산 ·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3건의 R&D 손톱 밑 가시를 없앤다. 다만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RCMS(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샘플링 정산, 신고포상금제 및 제재부가금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R&D과제 발굴 · 기획에 대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고, 신규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며, 글로벌 R&D역량 활용을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여섯째,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한다.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지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사업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지원 비중을 축소한다.

끝으로, R&D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협회 ·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ycheon@motie.go.kr

# 中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

## 한 · 중 환경산업 협력

환경산업체에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기회의 땅 중국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동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 등 환경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생태문명도시' 건설을 표방하며, 환경개선 분야에 2015년까지 2조5천억위안(43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동북아 환경개선은 물론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우리 기업의 진출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추하면서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진출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中, 대기질 개선에 304조원 투입…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

중국은 2002년 환경시장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 환경 분야 투자가 대폭 증가해 GDP에서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 30년간 0.7%에서 2.4%로 증대했으며, 투자액도 연평균 29.7% 성장해 왔다. 반면 우리 환경산업의 전체 해외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9%에서 2012년 7.8%로 감소추세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중국 환경시장을 놓고 자본과 기술을 겸비한 베올리아, 수에즈 등 글로벌 환경기업과 중국 내 정부투자기업인 심천수무, 중경수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환경기업은 대부분 자본이 적고 매출실적도 저조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기업 및 중국의 정부투자기업과 경쟁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산업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마련됐다. 한 · 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과 '한 · 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기 분야 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 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기술, 탈질 · 탈황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공동추진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양국 환경산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뿐 아니라 양국의 '환경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기 분야 오염방지 실증사업은 우리 환경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스모그 등 환경개선 수요 증대에 따라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을 수정해 투자액을 기존의 3조4천억위안(620조원)에서 5조위안(870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만 2017년까지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 청결에너지 대체, 자동차오염 저감, 중앙난방 강화 등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1조7천억위안(30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내 기술의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제철소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국의 대규모 장치산업 분야 진출이 촉진되고 안정적 후속사업 수주기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실적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 · 중 양국은 최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 · 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기 분야 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25일 스모그로 가득찬 중국 베이징 도로

**베이징에 '한 · 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설립**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과 이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국의 주요 성(省)별 한 · 중 환경산업포럼 개최, 현지시장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될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은 중국시장의 특수한 여건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감안한 효과적 전략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집진, 탈질, 자동차매연 저감, 멤브레인(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혹은 고체의 막), 토양오염 복원, 생활 · 건설 폐기물 처리 등 7대 유망기술을 환경수요가 큰 5개 중점지역, 즉 베이징 · 허베이성 · 산둥성 · 산시성 및 광둥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내 환경기술의 실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 · 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2014년 10월, 베이징)하는 한편, 법률자문 · 신용조사 · 수출보험서비스 제공 등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 지방성 · 민간과의 교류 · 협력 채널을 다변화한다. 중앙 환경부서 간 교류를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정부부처(주택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등)와 지방성(산동성 · 산시성 등 5개 성과 환경협력위원회 구성)과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한 · 중 환경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해 양국 전문가 · 기업 간의 교류 ·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상과 같이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기회를 살려 미세먼지 저감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환경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등 일련의 양국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수처리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산업과장
yoyopark@korea.kr

#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등 공정거래제도 개선

## 공정거래 15개 제도정비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19일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제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들은 공정거래규범의 성격을 고려해 공정위 소관 등록규제를 분류한 후 그간의 「공정거래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경쟁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판례를 반영해 '시장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장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

### 「공정거래법」 시행 33년, 달라진 시장상황 반영 필요해져

이번 방안은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 · 폐지하는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공정거래제도의 시장정합성을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33년이 지났으므로 그간 시장상황 등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제도의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했다. 비용-편익에 입각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모든 규제분석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수범자들, 즉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하위 규정에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화한 것도 주된 정비방향이다.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곤란함과 불확실성을 가져와 시스템 비효율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 비례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규정을 명확화, 투명화한 것은 규정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분야 15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과다한 가격수준을 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제품의 공급비용과 가격을 비교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했다. 둘째, 제조사가 유통업자에 대해 자신의 제품에 일정 가격을 정해 그 가격 밑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규정한 조항은 그 행위가 발생한 시장상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셋째,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 간 공동연구 · 개발, 기술협력은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업 간 기술협력 ·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소규모 계열회사 간 합병 ·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M&A 시 기업의 불편을 덜어줬다. 다섯째,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주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을 추가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여섯째, 조사 · 심의 등 공정위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 자료 열람 · 복사권 등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

개선과제 중 가장 대표적 공정거래규범이자 연혁이 오래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 부연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흔히 독과점 사업자는 경쟁적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행태와는 다르게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즉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높은 가격을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된다. 현행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가격수준을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비춰보는 것과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변동에 비춰보는 것이다. 수급변동 요인

은 시장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 변수에 따르는 것이고 계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비용변동 요인은 수급과 상관없이 사업자의 공급비용 변동만으로 정당한 가격수준을 판단하자는 것으로 시장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공급비용은 매우 복잡해 특정상품에 비용변동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규율당국은 물론 사업자 자신도 계측이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가격남용으로 제재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외국에서도 규제에 소극적이다. 미국은 독과점 사업자의 높은 가격책정을 문제 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 독과점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사회적 총편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규제해야 할 일이지, 단순히 높은 가격 자체만 봐서 제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높은 가격 측면(소비자 편익 측면)만 본다면 기업에 언제나 경쟁시장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나 이는 경쟁에서 이겨 독과점 사업자가 되고 보다 많은 이윤을 향유하기 위한 혁신과 모험가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경쟁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등에서의 논의동향이다.


지난 7월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커피믹스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조사가 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강제하는 유형이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선대상이 된 것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 위법 행위로 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가격경쟁의 제한만을 고려한 것으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경쟁 상황, 행위의 효과, 소비자 후생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제조사가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소매상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면 결국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쟁시장에서 특정상표의 제품을 할인가로 구입할 수 없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다른 상표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고, 합리적 제조업자라면 자신의 브랜드 내에서 가격할인을 금지해 도태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만약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아 제조업자가 서비스 개선 없이 가격할인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는 개선될 규정에 따라서도 여전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제도정비에 따라 상표 간 경쟁 활성화와 비가격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기업은 경영전략의 선택 폭 확대, 소비자는 상표선택의 다양성 확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상표 간 경쟁, 비가격 서비스 경쟁 촉진될 것

이제는 기업활동을 획일적으로 제약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특정계층에 특혜를 줘 바람직한 사회 · 경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도 선진국 소비자들처럼 '깐깐하고' 깨어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믿는다.

■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창조행정법무담당관
daewonh@yahoo.com

# 상시 감시 · 구조조정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할 것

##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011년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예금자 혼란, 후순위채 피해자 문제, 수십조원의 재원 투입 등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구조조정이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됐다. 현시점에서 저축은행 부실 원인과 그간의 추진경과 등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 건전경영 기반 마련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먼저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은행 · 보험사의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대부업체의 약진 등으로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됐고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문제가 촉발됐다.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도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해솔저축은행(구 솔로몬 계열)까지 총 30개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됐다. 이 중 16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으로, 13개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인수주체를 찾기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bridge bank)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보유 · 관리했음]으로 계약이전됐다. 나머지 1개 저축은행은 제3자 매각이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가교저축은행은 최근 예주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이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대부업체에 매각되면서 매각이 모두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등 누적부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후순위채 피해자, 대규모 재원 투입 이후 기금 회수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금융당국은 2011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 대해 1차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30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사진은 2011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몰려와 안내문을 읽고 있는 모습

〈표〉 저축은행수 및 자산 추이

| | 2010년 말 | 2011년 말 | 2012년 말 | 2013년 말 | 2014년 5월 말(자산은 3월 말) |
|---|---|---|---|---|---|
| 저축은행수 | 105개 | 98개 | 93개 | 89개 | 87개(2010년 말 대비 −17%) |
| 자산규모 | 86.8조원 | 59.4조원 | 49.0조원 | 38.9조원 | 37.7조원(2010년 말 대비 −57%) |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이 대부분 정리됐고 자본적정성도 제고됐다. 2010년 6월 말 11조9천억원이었던 저축은행업권의 PF대출 금액은 2013년 12월 말 2조1천억원으로 약 82% 감소했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통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이 2011년 6월 말 5.6%에서 2013년 12월 말 11.2%로 크게 상승했다.

둘째,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해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부과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를 진행해 예금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계약 이전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영업중단 없는 계약 이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30개 저축은행 중 10개 저축은행이 이 같은 개선된 방식으로 정리됐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 부실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 건전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지역밀착형 영업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바람직한 발전모델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을 통해 사금융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했고, 이를 통해 신용대출 금리인하(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를 20%대에서만 운영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상시감시시스템, 금감원 – 예보 공동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해 위험요인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불법행위가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인의 하나였던 만큼 대주주 자격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통해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 점포설치 기준완화 등으로 영업경쟁력 강화 추진

둘째,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셋째, 규제개선 등 제도정비를 토대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채무조정제도 등 영업여건 활성화를 위한 제도합리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등 서민금융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비스마르크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15년여에 걸쳐 시작되고 정리된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수십조원의 재원 투입 및 소비자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업계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ysrhee@korea.kr

#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노근리 평화기념관



노근리 평화기념관 전경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 닷새 동안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는 광기로 벌겋게 물들었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군이 '피난시켜 주겠다.'며 인근주민 500여명을 노근리 경부선 철로 일대에 모아놓고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유도 모른 채 불시에 불난리를 당한 마을 사람들은 철교 밑 굴다리(쌍굴)로 숨어들었고, 미군은 굴다리 앞 야산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굴다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조준 사격했다. 백수십명 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됐고 행방불명돼 사라졌다. 그리고 사건은 '반공'과 '친미' 뒤에서 잊혔다.

그러나 노근리 쌍굴 속, 그 무간지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끔찍했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겠는가?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알아달라고 울고 또 울었지만 반공이 국시며 친미가 생존전략인 종전 후의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과 집단의 야수성이 마을 촌부들에게 가한 폭력은 가혹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그들은 반세기 동안 울었고 반세기 동안 시름했다. 그 반세기의 울음과 시름 끝에, 2009년 노근리 옛 노송초 일원에 '노근리 평화공원'이 착공됐고 같은 해 건축가 이종호가 설계한 '노근리 평화기념관'이 2011년에 완공됐다.

이 나라에 세워진 대부분의 전쟁 관련 기념관 또는 시설물들은 엄정한 형태로 비장하다. 높은 기단, 엄격한 좌우대칭, 육중한 석재마감, 압도적인 스케일 등은 정태적이며 위압적이다. 이 정태와 위압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숭고한 희생으로 승화되고 가해자의 모든 행위는 악으로 규정되며, 종국적으로 반공은 성역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용산 전쟁기념관, 인천 상륙작전기념관, 백마고지 전적기념관 등은 그 형태와 동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일방향적 훈육을 도모한다.

건축가 이종호는 이 일방향적 훈육의 반대지점에서 노근리 평

변방의 집들을 둘러보며 그 집들에 눌러 붙어 있는 일상의 고단한 흔적과 역사를 들여다보고 싶다. 그 이야기들은 변방의 것이기에 계통 없이 들쑥날쑥일지도 모른다. 이 들쑥날쑥함이 다만 쓸 데 없는 헛것이 아닌, 중심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변방의 창조성에 대한 작은 흔적들이었으면 한다.

**최우용** 건축가 achitectchoi@daum.net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본부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의 흔적들을 찾아 떠나길 좋아한다. 저서로는 「유럽방랑 건축 + 畫」 「다시 관계의 집으로」가 있다.





노근리의 고통은 찢겨진 녹슨 철판의 파편들로 떠오른다.



쌍굴에 박혀 있는 총알자국

화기념관을 구상했다. 피해 규모와 가해원인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노근리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건축가는 비애에 젖은 위로와 악에 받친 추궁을 뒤로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환기시키는 데 집중했다.

관람객들은 수면 아래, 저 깊은 곳에 있는 지하1층 기념관 입구로 접근하게 된다. 작은 규모의 지하 전시관은 노근리 사건의 사실들만을 추려내 보여준다.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확인한 관람객들은 길고 협소한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 이는 쌍굴 속 닷새 동안의 공포를 복원하려는 것이리라. 통로 끝에 이르면 벼락 치듯 탁 트인 높은 공간이 나타나고 1층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유도된다. 1층 전시실은 잊혔던 사건을 복원시키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이제 2층으로 오른다. 좁고 깊은 상승의 공간을 거치면 기념관 외부로 툭 튀어나와 있는 유리박스 안에 서게 된다. 여기 '추모의 방'에서 관람객들은 유리 너머 무수한 총알이 박힌 쌍굴과 대면하게 된다. 이제 관람은 끝이 난다. 출구로 나오면 삼각형으로 찢겨진 녹슨 철판의 파편들을 옆에 두고 걷게 된다. 철판에 뚫린 구멍은 쌍굴에 박힌 총알의 은유런가?

'고통의 벽'을 지난 관람객들은 쌍굴로 인도된다. 건축가 이종호는 강요되는 기억과 선악 구분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는 무수한 개인들이 겪었던 처참한 고통의 기억이 사상과 이념 또는 정치적 윤색 속에서 방기되는 것을 경계하며 노근리 평화기념관을 설계했다. 기념관은 총알 박힌 쌍굴을 향해 있다.

지하 전시실은 노근리 사건의 사실들만을 추려내 보여준다.



기념관 입구는 저 깊은 곳에 있다.



#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금융규제 개혁방안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성이 정체되는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의 부재, 수익성 한계,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과거 영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이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에 주목하고,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모색은 금융현장에서 시작됐다. 12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 국민 등 금융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이들과의 접점에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공기업 등 22개 관련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약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다. 그 결과 금융현장에 숨어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 영업 규제수준이 높고 금융공기업 등의 서비스제공 기준 · 방식 등이 공급자 중심이라 이용자가 불편하며 규제를 지키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간 정부가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금융공기업 등의 숨은 규제가 지속됐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했다.

첫째,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 ·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진입 · 영업 규제는 폐지 · 완화하거나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Negative化)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자 했다.

셋째,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업권 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하고 기업 · 국민의 불편은 해소**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현장의 개선요청사항 및 자체 발굴과제 1,700여건을 검토해 700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기술력 · 성장성이 있는 중소 · 벤처 ·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 성장 ·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 · 선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담보 · 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 또한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적이 좋으면 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재기보증 지원 대상도 넓힐 예정이다.

둘째,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금융공기업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자에게 과다 · 중복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회적 비용과 민원 처리시간을 줄이는 한편, 금융공기업 등의 각종 내규에 숨어 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해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2%에 달하는 보증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전업주부와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간 판매채널의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원스톱 자문 ·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상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법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출자한도를 확대하며,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넷째,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다. 지난 4개월간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행정지도와 구두지도를 통해 근거 없는 규제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 · 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심의기구 · 규제포털 통해 상시 점검 · 공개 · 관리할 것**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점검 · 개선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공기업들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규제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국민의 규제개선 · 폐지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 소비자보호규제는  강화 ·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교육 등 시장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들을 내규 · 법규 등을 개정해 가급적 조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에 담긴 세부과제들을 앞으로 철저히 실천 · 점검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sbkoh1109@gmail.com



# 민간의 환경혁신이 정부정책을 만났을 때

## OECD의 환경혁신 관련 연구와 환경정책

OECD는 그간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제성장, 즉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으로 환경혁신(Environmentally-friendly innovation, eco-inno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OECD의 환경혁신 관련 연구는 환경혁신 ·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정책의 설계 특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민간 부문에서의 환경혁신은 이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과 조화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OECD ISSUE




지난 7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도요타의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동식 수소충전소에서 충전되고 있다.

OECD는 「2050 환경전망(OECD Environmental Outlook 2050)」에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75% 증가하고 대기 질, 물의 가용성, 독성물질 및 생물다양성 관리 분야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OECD는 현행 방식으로는 이러한 환경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품, 공정, 기술과 그 전파 및 적용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점진적(incremental), 와해적(disruptive), 급진적/시스템(radical/system) 혁신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지난 수십년간 민간의 환경혁신은 점진적 혁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실질적 환경개선에 기여했으나 그 성과가 소비 증가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급진적/시스템 혁신은 주로 소규모 회사 또는 시장 신규 진입자에 의해 개척되는 경향이 있다. 급진적/시스템 혁신은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높은 위험성을 가지며, 보완적 기술개발과 인프라 변화 및 사회적 학습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 · 불확실성 등 환경문제 특성상 정책개입 불가피**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음의 외부효과, 혁신과 관련한 양의 외부효과, 환경혁신 고유의 시장실패와 진입장벽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

먼저 환경문제와 관련, 오염물질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업 · 가계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경우 이들이 환경혁신 성과를 구매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 환경혁신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

혁신활동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이 갖는 특성이 시장개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1)가분성(indivisibility), 즉 연구개발 활동은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유발하고 2)불확실성(uncertainty), 즉 연구개발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지식 · 기술시장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만연하며 3)혁신이 갖는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즉 혁신이 갖는 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로 인해 연구개발자가 불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며, 시장에 맡겨둘 경우 저투자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혁신 고유의 시장실패 및 진입장벽도 시장개입을 필요하게 한다.

환경정책 등 주요 정책개입이 환경혁신을 촉진하는 인자라는 점은 실증적으로도 확인된다. 국내외 환경정책에 의해 특정 분야의 환경혁신활동이 가속화되며, 특히 기술혁신(특허출원 등)은 정책 강화 직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97년 교토 프로토콜 서명 이후 온실가스 저감기술 특허의 급증, 각종 환경규제 강화 이후 생화학 연료전지, 친환경플라스틱 특허출원 급증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가격책정, R&D 지원, 진입장벽 해소 등 정책조합 필요**

환경혁신정책은 공급과 수요 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급 측면 대책은 민간에서 환경혁신이 원활히 이뤄져 개발된 새로운 기술 · 시스템 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수요 측면 대책은 환경규제와 표준설정, 공공구매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신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격책정정책은 탄소가격 등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환경문제의 외부효과를 해소함으로써 기업 및 가계가 환경혁신을 채택 · 발전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환경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가격시그널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민간에서의 투자가 어려운 기초 분야의 장기 연구에 공공지원하는 정책수단이다. OECD는 특정 기술에 대한 선택적 지원보다는 에너지 저장 · 공급망 관리기술 등 시스템 탄력성에 대한 지원이 더 큰 편익을 창출하며, 이는 향후 개발될 기술의 진입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상위 기술이 개발돼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입장벽 등 제거대책은 환경혁신 분야에 고유한 시장실패, 특히 기존 기술 · 시스템 · 기업의 우세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연구개발 및 환경혁신 성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민간지원, 특정 분야에 집중된 연구개발 지원보다 타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중립적 범용기술 지원, 급진적 환경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신규 기업가적 회사 육성, 혁신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개발로의 이행 원활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선화**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sunhwachung@korea.kr



환경혁신 전파 ·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지적재산권(IPR) 보호시스템 아래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예: 자발적 특허 풀 등) 등 확산 촉진, 표준 · 잘 설계된 규제 · 혁신적 공공구매 등 환경혁신 시장 강화, 단기 비용에 집중하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표지 · 인증 · 교육 등 소비자 행동 변화 대책이 포함된다.

**규제 등 정책수단보다 엄격성 등 정책설계가 관건**

환경정책은 일차적으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나 탄소가격 책정, 부담금, 조세, 환경규제 등은 환경혁신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므로 환경혁신 촉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OECD는 환경정책이 기술혁신을 촉진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책수단의 유형(예: 규제, R&D, 조세, 부과금 등)보다는 환경정책의 설계 특성이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로 파악했다.

OECD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대체연료수송 분야 관련 각 정책수단의 엄격성, 예측성, 탄력성, 깊이, 영향 등 정책설계 특성으로 구분해 각 특성과 환경혁신 유도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엄격성이 환경혁신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기적으로 예측성과 신뢰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혁신적 수단의 개발(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확인됐으며, 더 엄격한 정책은 혁신적 기술 개발에 더 큰 유인책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특성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인 정책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혁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성(기술중립성)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혁신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기술경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유도한 후 최선의 수단을 탐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설계 특성을 조합한 분석결과, 환경정책의 엄격성만 강조하는 경우보다 정책의 예측성(또는 안전성) 및 탄력성을 함께 확보하는 경우 환경혁신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환경문제의 해결과 정책을 통한 환경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입이 불가피하다. OECD의 분석결과는 정책개입을 통한 환경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정책의 엄격성은 환경혁신을 추진할 인센티브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면서 적정한 엄격성을 유지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책의 예측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탄력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상업적 · 기술적 불확실성 외에도 환경혁신 분야의 투자는 환경정책의 엄격성, 시점, 성격과 이행 기간 등이 투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추가적인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시그널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환경문제의 진화와 함께 환경혁신정책도 진화된 우선순위와 수요를 반영해야 하고, 정책수단도 개정 · 적응돼야 하며,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변화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혁신과 산업 · 경쟁 이슈를 고려한 정책배합도 필요하다. 가능한 기술발전경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특정 기술발전경로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안적 경로를 동시 지원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촉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의 OECD 분석결과 획기적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가격시그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정책배합의 선정 시 필요한 혁신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관련 기술을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환경기술로부터 환경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준의 정책공조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 다른 정부기관 및 지역 정부도 환경혁신의 주요 주체로 환경문제 대응역량을 개발하고 환경제품과 서비스를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신규기술 전파를 위해서는 연구와 산업 간 조정도 필수적인데, 정부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연구와 산업 간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이전 네트워크, 인큐베이터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와 산업 간의 정보순환을 촉진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이 환경혁신을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괄타결원칙의 덫에 걸린 WTO 무역원활화 협정

요즘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 극심한 분열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WTO 수장으로 취임한 첫 해 본인의 최대 치적으로 자부했던 발리 패키지가 성공이냐 실패냐의 중대 기로에 선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WTO 법률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 채택 마감시한이 7월 31일이다.

WTO ISSUE




발리 패키지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취임 첫 해에 이뤄낸 쾌거였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의 경우 최근 협정 발효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들이 '일괄타결원칙'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세계 무역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진전 중 하나라고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행준비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전체 DDA 협상타결을 전제로 이 협정은 잠정발효의 원칙하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필자 주; 2001년 도하 선언 제47항에서 DDA 협상은 동시에 시작해서 모든 협상을 동시에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한 협상만을 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됨.)을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를 위한 노력이 막판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아프리카 연합의 '일괄타결원칙'에 최빈국들 지지 보내**

에스테반 코네호스(Esteban Conejos)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준비위원회(PCTF; Preparation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의장은 지난 7월 10일 임시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의 유연하고 열린 자세가 7월 24~25일로 예정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정서 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잠정이행(provisional application)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통상장관회의에서 TF 협정 이행은 2001년 도하 선언 제47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급기야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조정국인 레소토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면서 도하 선언 제47항 '잠정이행'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당겼다. 당시 아프리카 연합은 TF 협정은 남은 DDA 협상과의 균형을 위해 일단 전체 DDA 협상을 종료한 후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것이 '일괄타결'이라는 WTO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발리 제9차 각료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올해 말 예정된 포스트 발리 워크프로그램 마련이라는 발리 패키지 일정 전체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발리 패키지의 전제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실적으로 DDA 모든 협상이 동시에 종료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DDA의 완전타결 이전이라도 조기합의가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약속, 즉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정신에 근간을 두고 진행한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이 다 끝난 현시점에서 일괄타결원칙을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협정의 파국은 물론 그 후속작업인 포스트 발리 워크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남미와 아시아 지역 여러 최저개발국(LDC; Least-Developed Country)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에겐 일괄타결원칙을 볼모로 무역원활화 협정상에 보장된 이행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실히 챙길 수 있다면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지도 모른다.

WTO 수장인 호베르토 아제베도를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칫 이런 논의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무역원활화 협정은 물론 남은 DDA 협상을 끌고나갈 추동력이 사라지고 향후 WTO 차원의 어떠한 다자간 협상도 시도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은 자명했다.

그렇다면 왜 LDC 그룹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에 반기를 들고 잠정이행이란 카드까지 내밀며 협정의 발효를 늦추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해 9월 2일 케냐 나이바샤에 있는 원예농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이곳에서 생산된 꽃 대부분은 유럽으로 수출된다.

**이승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aerock01@daum.net



첫째, 협정 이행능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확실한 보장 없이는 링 안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선진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정이행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배양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이 TF 협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나 '강화된 통합체제(EIF; Enhanced Integration Framework)' 등의 자금을 협정상의 역량배량 지원프로그램으로 적당히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되며 TF 협정이행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진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둘째, 발리 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의 이해가 큰 무역원활화 협정 논의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합의사항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리 패키지 내 다른 농업 이슈나 무관세 · 무쿼터(DFQF; Duty Free, Quota Free) 시장접근, LDC 특혜 원산지 부여 및 LDC 서비스 웨이버 등 LDC 관련 이슈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무역원활화 협정만의 수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의 이익보다는 개도국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통관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TF 협정에 반대해온 국가들에는 '이익의 균형' 상실이란 반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난 12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볼모로 전체 발리 패키지 타결을 끝까지 거부하다 극적으로 합의에 응했던 인도가 또다시 TF 협정의정서 채택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번 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식량안보 분야에서 자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F 협정의 이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LDC 국가들이 'TF 이행 지원의 확실성 보장'이라는 집단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의 경우 자국의 주요 관심사인 농업 분야의 이해 관철을 위한 전략적 보이콧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결국 현재 개도국과 LDC 그룹들의 TF 협정 잠정이행 요구는 향후 전개될 DDA 협상에서 다양한 LDC 이슈나 개별 국가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그 해법도 고도의 복잡성과 정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주요국, 당근과 채찍 병행…개도국 · 선진국에 윈윈 게임 돼야**

그간 주요 선진국들은 LDC 국가들에 협정 이행능력 지원에 대한 확신과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제공할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 미 의회가 2015년 종료되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의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해 왔다. 세계은행, UNCTAD, IM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정상들과의 면담, OECD 각료회의, APEC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발리 패키지가 다자통상체제의 존립에 미치는 함의를 강조하며 주요국의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인지 지난 6월 적도기니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발리 합의는 DDA 협상타결의 중요한 디딤돌이며 TF 협정은 발리 결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TF 협정의 쟁점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갔던 인도도 7월 호주 G20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언론에 TF 협정 채택을 식량안보 이슈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완화된 입장을 흘리고 있다. TF 협정의정서 채택 마감시한을 앞두고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난했던 협상과정을 되돌아볼 때,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은 늘 그렇듯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이며 어느 일방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도 없다. 모두가 조금씩 불만족스러워야 협상은 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여름이 지나고 나면 발리 패키지의 성패는 물론 향후 WTO 권능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회원국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일괄타결원칙'의 덫에 걸린 무역원활화 협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포스트 발리 워크프로그램 논의에 나설지 아니면 방기곡경(旁岐曲逕)의 악수로 무역원활화 협정은 물론 WTO 전체를 정도가 아닌 샛길과 굽은 길로 밀어 넣고 또 다른 10년을 기약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EU가 세계 최대 농식품 수출권이 된 비결은?

## EU 농업의 활로인 품질과 이를 보증하는 표시제

전체 농업인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고 35세 미만은 6%에 불과하다. 농가당 경지규모가 미국 농가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가소득 수준은 일반 가구소득의 60% 수준이다. 마치 우리나라 농업의 모습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EU 농가의 모습이다. 이러한 EU 농업이 2013년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과연 무엇이 EU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한중 FTA 협상, 쌀 관세화 논의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업계가 EU 농식품정책의 경쟁력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EU ISSUE

EU 28개 회원국은 지난 2013년 1,200억유로(한화 170조원 상당)의 농식품을 수출함으로써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농식품 수출국(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EU는 단일 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농식품 수입국(1,015억유로)인 동시에 최대 수출국의 지위에 서게 됐다.

수출금액은 2012년에 비해 5.8%의 성장을 기록했다.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곡물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금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농식품 무역은 2010년 이래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흑자폭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3년에는 186억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EU 경제권 전체 수출금액에서 농식품 수출금액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 화학 · 의약품에 이어 농식품이 네 번째로 큰 수출 분야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위스키 · 포도주 · 제과류 · 파스타 · 밀 등이다.

그렇다면 북남미, 호주 등 대규모 농업을 하는 국가를 제치고 EU 경제권이 최대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게 된 동력은 무엇인가? 노동과 투입재(비료 · 농약 · 에너지 등) 비용이 높은 구조로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만회하는 것은 EU 농식품의 품질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표시제일 것이다. EU는 자국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시키는 표시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자.

### 경쟁력의 열쇠는 '품질' … 품질관리는 다양한 '표시제'로

EU와 미국 간에 진행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은 2011년 말부터 양측 간 사전작업이 시작됐고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측 간 교역규모가 무려 4,550억유로에 달해 TTIP가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직 ·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이슈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

로 '지리적 표시제도(GI)'다. EU는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그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EU는 EU 농식품이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GI를 통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뛰어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미국산 농식품 공세를 막고 미국시장으로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러한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에 EU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국에 항상 GI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1935년 원산지통제제도인 AOC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포도주 산지의 중심지 보르도에 위치한 페삭레오냥 포도농장

샤토마고, 샤토무통로쉴드, 로마네콩티 등 숱한 찬사가 붙어 있는 프랑스 와인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원산지통제제도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1935년 원산지통제제도인 AOC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와인의 생산지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포도재배방법 등을 엄격히 관리해 기준에 맞는 와인에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AOC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고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최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닷와인(.wine), 닷뱅(.vin)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와인생산국과 EU 집행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럽의 와인 명가들이 닷와인, 닷뱅이라는 새로운 도메인 네임에 우려를 표한다. 저급한 와인들이 고급 와인명을 도메인으로 선점해 고급 와인으로 행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유한 와인명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자칫 매출액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상 확대, 로고 사용 의무화 등 지리적 표시제 강화 추세**

EU 지역에 지리적 표시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포도주 분야가 시초다. 이것이 위스키 등 증류주나 일반 농식품 분야에 점차 확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EU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지탱하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정착됐다.

지리적 표시제인 GI는 크게 원산지 명칭 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와 지리적 표시 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떤 명칭이 PDO로 인정받기 위해선 생산의 모든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농식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그 지역에 기원해야 한다. 어떤 명칭이 PG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산과정의 한 단계는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EU의 지리적 표시제 상품의 판매액은 543억유로(2010년 기준)이며, EU 식품 · 음료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상품의 수출액은 115억유로를 기록했으며 EU 식품 · 음료 수출의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 비(非)지리적 표시제 상품에 비해 평균 2.23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그만큼 시장에서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법(EU 1151/2012)에 따르면 EU는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콜릿, 가죽 등에까지 지리적 표시 대상을 확대했으며, EU산 지리적 표시제 상품은 PDO, PGI 로고 사용이 의무화된다. EU의 지리적 표시제는 미국의 상표권 등에 비해 권리가 특정 생산자 1인에 귀속되지 않고 기준에 맞춰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생산자 그룹

박상호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
psh23@korea.kr



에 해당 지리적 표시제를 적절히 모니터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신청에서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산간지역 생산품' 표시 도입하고 유기농 품질기준 높여**

앞으로 EU 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산간지역 생산품(mountain product)' 표시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산간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회원국이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EU의 소위 '2012년 농식품 품질법(Quality Regulation)'에 각종 품질관련 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EU 집행위는 '산간지역 생산품'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최초로 마련했다(2014년 6월 14일).

'2012년 농식품 품질법'에 따르면 'Mountain Product' 표시를 하기 위해선 가축사료나 원료가 본질적으로 산간지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EU 기준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산간지역에서 유래한 가축사료가 가축 사양(diet)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반추동물(ruminants)의 경우 60%이며 돼지의 경우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1차 생산물에 비해 유제품 등 가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설의 입지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간지역으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가공된 경우 위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지역농업(local farming)'이나 '직거래(direct sales)', '도서농업(Island farming)' 등의 새로운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은 EU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부가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10년간 EU 내 유기농시장 규모가 4배로 확대되는 등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EU는 유기농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액션플랜을 발표했다(2014년 3월 24일).

2012년부터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현행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유기농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는 EU 농업이 북남미 · 호주 · 뉴질랜드 등의 대규모 농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유기농, GI 등의 식품품질정책 강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로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유지해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EU는 지난 4월 30일 유기농 동등성(Organic Equivalency)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집행위 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442/2014)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EU와 제3국 간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3국이 EU에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의 액션플랜에 따른 조치로 이해된다. EU가 현행 유기농 동등성 시스템(equivalence)을 이행준수(compliance)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제3국이 EU 시장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의 유기농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즉 EU 유기농 식품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보았듯 미국이나 신대륙의 대규모 농업에 비해 가족농 중심인 EU 농가의 가격경쟁력은 낮게 마련이다. 미국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가 180ha인데 EU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가 14.3ha라는 점을 단순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EU 농식품산업이 설 자리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품질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궁리하는 것이 EU 농식품정책의 현주소다.

28개 회원국 간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EU 농업의 경쟁력은 대체로 품질, 식품안전으로 귀결된다. 앞에서 본 지리적 표시제, 유기농 기준 강화 등은 EU 농식품 품질정책의 대표적 예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표시제의 도입, 식품안전 기준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EU 식품시장을 두드려야 하는 제3국의 입장에서는 EU 시장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EU 28개국의 농식품 품질, 식품안전 기준이 단일화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우리 농식품 수출업계가 EU 제도에 익숙해진다면 유럽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가교역조건 역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EU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Anti-Banking Company '심플 은행'

## 미국 은행업의 새로운 조류

'Simple was started out of frustration with banks.' 이것은 지점 하나 없이 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심플(Simple) 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수십년간 이어진 은행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심플은 가히 은행업계의 혁명가라 할 만하다. 심플은 고객들이 바라는 은행의 특징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스마트하고 손쉽게 그리고 언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업을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아직 은행업에서 주력은행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현대시대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은행(Banking built for the modern age)'임에는 분명하다 하겠다.

# 미국 경제



심플의 창립자 겸 CEO, Sharmia Karkal(왼쪽, CFO & 공동창립자)은 카네기멜론대 MBA 출신으로 맥킨지컨설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Josh Reich(오른쪽, CEO)는 호주 멜버른대 졸업 후 카네기멜론대 MBA 출신으로 금융공학 전문가다(출처: simple.com).

심플은 설립 5년에 불과한 인터넷은행이다. 그나마도 2011년 11월 친지를 상대로 베타테스팅을 거친 후 2012년 7월부터 은행업을 시작했으니, 은행간판을 내건 지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신생 은행이다. 심플이 필자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4년 2월경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스페인 제2은행인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가 이름도 생소한 심플에 무려 1억1,700만달러를 들여 M&A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나서였다. 뉴욕타임즈는 이 기사에서 심플을 수수료를 물리지도 않고 고객에게 풍성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은행 스타트업'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이렉트 디지털-온리 은행으로 출발**

심플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혁명적인 은행이다. 회사의 모토는 '고객편의 최우선'으로, 고객에 초점을 맞춘 혁신(user-focused innovation)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세상에서 고객과 은행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유일한 디지털-온리 은행(direct digital-only version of bank)으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심플은 실제 유형적인 지점이 없이(branchless) 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100% 인터넷은행이다. 놀라운 점은 그러면서도 입금, 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금융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둘째, 은행의 금융거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FDIC(미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 적용을 받는 뱅콥(Bancorp) 은행과 연계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심플의 고객들은 하얀색의 고급스런 비자 데빗카드(Debit Card,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현금 입출금을 위해 미국 내 ATM 거래망 중 하나인 올포인트(Allpoint)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이 별도 부가수수료 없이 미국 내 5만5천여개 ATM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simple.co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simple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익모델은 기존 은행이 추구해 왔던 각종 수수료 수입에 근거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행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계좌별 최저유지금액 제한이 없으며, 계좌개설 수수료, 월별 계좌유지수수료, 부도수표처리 수수료, 은행계좌 간 이체수수료도 없다. ATM 이용에 따른 수수료도 미국 내에서는 무료다. 대신 심플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파트너 은행인 뱅콥과 나누고, 고객이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수수료를 올포인트사와 분배해 가지는 수익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객을 최우선하는 보다 스마트한 은행**

심플은 개인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기능과 별도로 편의성을 감안한 통찰력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창안한 새로운 방안으로는 첫째, 목표(Goals) 기능이 있다.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생의 목표를 위해 조금씩 모아가

〈그림 1〉 목표(Goals) 기능




〈그림 2〉 Safe-to-Spend 기능



**나석권**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skna1966@gmail.com



심플 은행은 미국 내 ATM 거래망 중 하나인 올포인트(Allpoint)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이 별도 부가수수료 없이 미국 내 5만5천여개 ATM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ATM을 이용하고 있는 뉴욕 시민들의 모습

는 비용 등 미리 산정할 수 있는 비용발생 소요를 기재해 두는 기능이다. 몇 가지 '목표' 항목을 정해 두면, 미리 산정한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식으로 공제해 나가면서 사실상 계획적인 금융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무분석 기능이다.

둘째, 사용가능예산 내 비용지불시스템, 소위 'Safe-to-Spend' 기능을 들 수 있다. 은행 통장에 기재돼 있는 현재 잔고는 현시점에 잔고로 남아 있는 금액일 뿐 매월 말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 음식료비, 선물구입비 등 조만간 발생할 비용소요를 차감한 실사용금액은 아니다. 'Safe-to-Spend' 기능은 상기 '목표' 기능에 기재한 예상 소요나 당장 임박한 지불소요 등을 공제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을 보여준다. 결국 고객지향적인 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실생활에서 짜임새 있는 금융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개인맞춤형 금고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 사후적으로도 고객이 어떻게 지출을 해왔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호지향적 지출리포트 기능이 있다. 과거의 지출을 식당, 공과금, 외식과 같은 '항목별' 혹은 '사용처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사후적으로 본인의 지출 습관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심플은 디지털 은행인 만큼 고객 수요에 속도감 있고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점이 없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나 고객 특성에 맞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통화를 하거나 모바일채팅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심플은 대다수 금융거래에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은행 간 금융거래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플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미국 대다수 은행은 평균 4일이 걸리는 데 반해 심플은 불과 하루면 거래가 완료된다.

영업개시 후 2년 동안 심플은 의미 있는 성장을 해 왔다. 지난해 1월 2만여명의 고객들이 2억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던 것에서 올 6월 현재 고객은 11만여명으로 늘어났고, 거래규모도 17억달러로 급증했다. 하지만 디지털영업을 통해 새로운 은행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BBVA의 합병으로 자금확충이 이뤄지긴 했지만 향후 사업전망 및 수익모델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주력은행으로 자리 잡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수료 의존 韓 은행 변화 필요…디지털화 통한 고객창출을**

불투명한 향후 전망에도 불구하고 심플이 추구하는 고객지향적 혁신노력은 우리 금융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세를 구가하는 심플의 사례는 예대마진의 축소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금융계에 영업전략상 시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 발굴에만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창출을 유도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점 증설을 통한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나 스마트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돼가는 금융환경에서 심플의 'Goals'; 'Safe-to-Spend'와 같은 고객지향적 재무분석 기능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앱을 통한 디지털화로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부응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BBVA 은행이 심플을 인수합병한 후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 진출을 염원해 왔던 BBVA가 심플 인수를 통해 미국 소매금융업에 정착해 가는 사례는 해외 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금융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플의 변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심플이 보여준 혁신노력을 한국형 금융혁신으로 재정립해 가는 금융권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박윤수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parkyoonsoo@mk.co.kr



# 손 놓은 국회, 애타는 복지부

지난 7월 25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20만원)으로 인상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처음 실체가 드러난 지 20개월 만이다.

사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전산 구축부터 수급대상자 파악까지 정상적이라면 6개월, 아무리 빨라도 4개월이 필요한 작업을 2개월 만에 '뚝딱' 해치워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는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랬던 복지부가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7월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으니 "그동안 괜히 복지부가 야당을 압박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급하게 서두르다 사고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9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기자 역시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복지부에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5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야당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였다. 아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부터 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은 2개월간 '벼락치기'에 돌입했다. 연금정책국이 위치한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사무실은 주말 밤 자정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기초연금법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국회가 정상적인 심의를 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장면이다. 그런데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게 합의해 준 야당에 감사하다."며 2개월 만에 불가능한 일을 마무리지었다. 기초연금 제도설계부터 국회 통과,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했던 또래 사무관은 "(「기초연금법」에 대해)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밤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또 다른 복지공약인 '맞춤형 급여 개편'에 비하면 양반이다.

지난해 5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1년 3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올해 4분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고 연내 시행도 어려워졌다. 물론 이번에도 국회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맞춤형 급여개편 연내 시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무원들은 올해 2월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를 읍소했지만 야당은 8월에나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상반기에는 「기초연금법」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도 시행 준비에만 6개월이 걸리는 법안을 무작정 미루고 있는 국회는 지나칠 정도로 한가해 보인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이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당장 150만명, 내년 개편이 완료되면 180만명이 월 1만4천원 정도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대상자 45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생계비로 삶을 지탱하는 이들에게는 절실한 제도다.

매일 4시간을 할애해 세종청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의원들에게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달 국회에서만이라도 법안이 처리된다면 하루빨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이들의 한마디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生生 관가엿보기〉는 각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이 보고 느낀 공직현장 분위기, 기사에는 쓰지 못한 에피소드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inplant@hanmail.net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지냈다. 신문에 500편, 잡지에 160편 이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으며 「지식의 대융합」,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 등 저서 45종을 펴냈다.





# 청색경제 시대의 서막

8월 21일 서울에서 '청색기술 및 청색경제 국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청색경제(blue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군터 파울리(Gunter Pauli)가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0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의에서 파울리는 재닌 베니어스(Janine Benyus)와 함께 「자연의 100대 혁신 기술(Nature's 100 Best)」이라고 명명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생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생물을 모방한 기술 2,100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100가지 혁신 기술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미국의 생물학 저술가인 베니어스는 1997년 「생물모방(Biomimicry)」을 펴내고, 이 책의 부제처럼 생물모방을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혁신(innovation inspired by nature)'이라고 정의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생물모방은 21세기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베니어스는 이 책에서 생물모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물은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으며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해왔다.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물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성취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뭇잎을 모방한 태양전지, 거미줄처럼 꼰 강철섬유, 조개를 모방한 깨지지 않는 세라믹, 침팬지로부터 배운 암 치료법, 다년생 들풀에서 영감을 얻은 다년생 곡물, 세포처럼 신호를 보내는 컴퓨터, 미국 삼나무 숲에서 교훈을 얻는 경제 등 어떤 경우에도 자연은 훌륭한 모델이 된다."

2010년 6월 파울리는 자연의 100대 혁신 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 조명한 저서인 「청색경제」를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10년 안에, 100가지의 혁신 기술로, 1억개 일자리가 생긴다(10 years, 100 innovations, 100 million jobs)'이다. 파울리는 이 책에서 100가지 생물모방 또는 생물영감 기술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억개의 청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청색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녹색경제는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동일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적은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해 왔다. 녹색경제는 많은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구되었던 실행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했다.

만일 우리가 시야를 바꾼다면, 우리는 청색경제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성의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청색경제는 무엇보다 재생을 약속한다.

청색경제는 생태계가 진화 경로를 유지하여 모든 것이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성, 적응력, 풍요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울리는 이 책에서 청색경제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을 본뜨는 혁신 기술을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2012년 펴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제안한 바 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임에 틀림없다. 8월 21일 국제세미나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청색기술과 청색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의 오명을 벗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이 안내하는 쉽고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 노후소득 보장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명의 연장과 함께 은퇴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노후대비는 낙제수준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전통적인 노후보장방식은 쇠퇴하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같은 대안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년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조기퇴직의 경향이 강화돼 왔으며, 교육비 및 주거비 상승으로 말미암아 노후를 위한 저축은 더욱 버거워졌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의 고령빈곤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현 상황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며 소득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까?

### 노후소득 비율, 적정 추정치에 못 미쳐… 중간 이하 소득계층 더 심각

필자는 노후소득 대체율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조사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마이크로 자료들을 이용해 장년기(45~54세) 소득에 대비한 노후소득 비율(노후소득 대체율)을 추정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자세한 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상이한 시기의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및 실질임금상승률이 조정된 소득을 이용했다는 것과 자료에 따른 표본구성의 차이를 최대한 보정했다는 점만을 밝혀둔다. 〈그림〉은 1936년생, 1941년생, 1946년생, 1951년생 등 네 코호트(cohort; 특정한 연도에 출생해 동일한 시기와 연령의 경험을 공유한 집단)의 소득대체율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령과 소득대체율의 궤적(profile)이 코호트 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준다. 이 연구는 〈그림〉과 유사한 분석을 각 소득분위별로 수행함으로써 노후소득 대체율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먼저 한국의 노후보장성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장년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은 대체로 65세에 50%, 70세에 40%, 75세에 30% 수준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기존 국내연구들이 제시한 적절한 노후소득 대체율의 추정치(50~70%)나 1990년대 미국의 55세 소득 대비 70세 소득 비율(60~70%)에 비해 낮다. 소득분위별 분석결과는 특히 중간 이하 소득계층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컨대 하위 20% 가구의 70세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국가 저소득층 소득대체율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이 보여주는 코호트 간 차이에 관한 결과는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 근래의 코호트로 올수록 노후소득 보장성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1951년생부터 소득대체율이 다소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개선의 추세는 매우 완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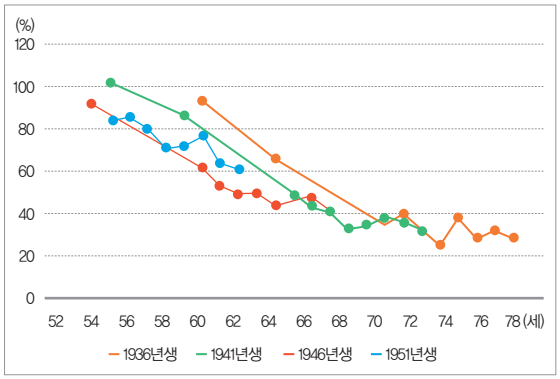
### 근로소득 통해 노후소득 대체율 높이는 것은 한계 있어

그렇다면 이상의 결과는 앞으로의 노후소득 보장성 전망과 정책적 과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가? 먼저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고령인구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최근 여성을 중심으로 50세 이후 고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결과에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70세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장년소득 대체율은 약 20%로 전체 노후소득 대체율 40%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의 주된 정책기조는 정년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chullee@snu.ac.kr



〈그림〉 각 출생 코호트의 장년기(45~54세)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




이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고령인구 고용을 증진함으로써 고령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향후 노후소득 대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80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의 변화는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법제화돼 2016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연장도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고용의 양적 확대를 통해 고령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나쁜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있는 여건에서 질적 개선 없는 양적 고용증가는 고령빈곤의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공적연금의 확대도 근래의 코호트로 오면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후소득 대체율의 하락을 막기엔 공적연금소득의 장년소득 대체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이 장년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0세 무렵에 5~6% 정도였다. 70세 때의 고령연금(social security) 소득이 장년(55세) 소득의 약 30%가량을 대체하는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의 성숙과 함께 공적연금소득을 얻는 가구비율이 늘어나면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수령연금액수가 낮고 앞으로 수급연령은 높아지게 돼 있어서 공적연금소득의 증가가 노후보장 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단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국의 사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도와 코호트를 막론하고 60세 이후의 사적연금 및 재산소득은 정년소득의 6% 이상을 대체하지 못했고 평균적인 대체비율은 3~4%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은 1990년대 말 70세 때의 개인연금소득이 장년소득의 약 15%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다면 사적연금이 노후소득의 매우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 은퇴에 대비해 청장년층의 저축여력과 저축유인 높여야

이러한 여건에서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인구의 근로소득 증가나 공적연금 수급액의 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도 공적연금소득도 없는 현재 저소득 고령인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지출 확대와 생계형 근로의 유지를 통해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 좋은 방안을 생각하긴 어렵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공적 이전지출을 다음 세대에까지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은 현재의 청장년층으로 하여금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령빈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매우 미미한 수준인 사적연금소득의 소득대체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선 청장년층의 저축여력과 저축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이나 건강에 대한 공적 투자의 확대는 청장년층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축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제개편을 포함해 은퇴를 위한 저축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이철희(2014),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코호트 및 기간별 분석결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 발표논문(2014년 5월 30일)



# 8월의 크리스마스

## 존 루이스 백화점 'The Bear & The Hare'
## 하비니콜스 백화점 'Sorry, I spent it on myself!'
## 라센자 '브라컵 사이즈 합창단'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갓 샤워를 하고 돌아서도 금세 눅눅해지는 여름, 기분이라도 시~원한 겨울 기분 나게 이번 호는 크리스마스 광고들을 소개한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트리 아래에서 선물을 나누는 사랑 가득하고 따뜻한 풍경으로 이미지화돼 있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존 루이스 백화점은 이런 사람들의 감성을 활용한 광고를 매년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뒀다. 201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곰과 토끼의 우정을 그린 'The Bear & The Hare' 애니메이션 광고로 큰 울림을 줬다(그림 1).

곰과 토끼는 찰떡궁합 친구 사이다. 어딜 가나 같이 가고 늘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겨울잠의 계절이 다가왔다. 숲속 마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지만 곰은 동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굴로 돌아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토끼의 마음은 안타깝다. 곰이 동면 중인 동굴 앞에 선물 하나를 두고 돌아서는 토끼. 크리스마스 날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 할 즈음, 홀로 쓸쓸한 토끼에게 누군가 다가온다. 곰이다. 생애 처음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된 곰과 그런 곰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 토끼. 화면이 빠지면 동굴 앞에 풀어진 선물박스 속 알람시계가 보인다. 크리스마스로 맞춰 놓은 알람시계 덕분에 곰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라이온 킹〉, 〈포카혼타스〉, 〈미녀와 야수〉의 연출을 맡았던 전 디즈니의 베테랑 아티스트 아론 블레이즈에 의해 탄생했다. 여기에 영국의 유명 여가수 릴리 알렌이 밴드 킨의 2004년 히트곡 'Somewhere Only We Know'를 리메이크해 부르며 광고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9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존 루이스 백화점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캠페인의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칸 국제광고페스티벌에서 필름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존 루이스 백화점이 가장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정서에 기반한 광고로 감동을 줬다면 영국의 또 다른 백화점 하비니콜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늘 색다른 광고 코드로 주목받은 하비니콜스의 이번 테마는 '미안, 나한테 다 써버렸어!(Sorry, I spent it on myself!)'다.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거금을 쓰는 대신 소중한 나를 위해 돈을 쓰



〈그림 1〉 존 루이스 백화점 'The Bear & The Hare' 광고

〈생각하는 광고〉는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쉽고 단순하게 표현한 우리 시대의 '웰 메이드' 광고를 소개한다. 광고 속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자.

**권현선**
대홍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rookieall@naver.com



〈그림 2〉 하비니콜스 백화점 'Sorry, I spent it on myself!' 광고

라는 이 발칙한 캠페인은 기존 통념을 뒤집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하비니콜스는 철수세미, 고무밴드, 칫솔, 클립, 유성펜, 도어받침대 등 2유로 미만의 크리스마스 한정판 기프트 콜렉션을 출시했다.

광고는 'Sorry, I spent it on myself'라는 이름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컬렉션을 판매한다는 프로모션과 함께 황당한 하비니콜스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반응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그림 2). 잔잔한 캐롤이 흐르는 가운데 딸에게 선물을 받은 아버지. 기대감을 한가득 안고 딸의 선물을 풀어 보지만 뜻밖의 플라스틱 밴드 앞에 망연자실한다. 그래도 하비니콜스라며 애써 기뻐하는 척하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을 때 딸의 발엔 명품 하이힐이 당당하게 빛을 발한다. 이렇듯 황당한 선물 앞에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에겐 멋진 구두, 명품가방, 화려한 드레스를 선물한




〈그림 3〉 라센자 '브라컵 사이즈 합창단' 광고

이들의 만족스러운 모습이 대비될 때 '다른 사람에겐 작게 나에겐 통~크게(A little something for them, a bigger something for you)'라는 카피가 나오면서 해학적 재미를 준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소비의 관습과 행동으로 연결해 파격적 재미와 유머로 이색적 소비컬처를 만들어낸 용기 있는 크리에이티브'라는 평가와 함께 이 캠페인은 올해 칸에서 3개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그랑프리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인들에게 크리스마스 1순위 선물은 속옷. 캐나다 퀘백에 소재한 란제리 브랜드 라센자(La Senza)는 이에 맞춰 201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국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컵 사이즈를 소재로 한 '브라컵 사이즈 합창단'이라는 독특한 바이럴 광고를 선보였다(그림 3). 라센자는 빅토리아 시크릿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섹시 콘셉트의 란제리 브랜드다.

다양한 미녀 모델들이 등장한다. 그녀들의 옆에 A, B, C, D, E, F라는 알파벳이 뜬다. 그녀들이 하얀 천이 깔려 있는 매트 위에 나란히 눕자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고, 자신의 컵 사이즈에 맞게 A부터 G의 피아노 음을 낸다. 각 파트의 소리는 아카펠라처럼 합쳐져 '아름답게 장식하세(Deck the Hall)'라는 친숙한 캐럴을 섹시한 캐럴로 완성시킨다. 마지막에 라센자와 함께 '매우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라'는 의미심장한 카피로 광고는 마무리된다.

일명 '란제리 미녀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이 동영상은 게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아내 혹은 여자친구의 가슴 사이즈를 잘 모르는 남성들에게 이제는 컵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선물하라는 메시지를 독특한 아이디어와 결합해 단순한 섹스어필 광고와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줬다.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유포되며 현재까지도 독특한 크리스마스 광고로 회자되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광고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가. 그래서 생각해본다. 8월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광고를! 새로운 블루오션은 항상 남이 가지 않는 길 너머에 있으므로.

#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등'을 그리워하는 당신께 바칩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단어가 '품'이라면 아버지의 단어는 '등이 아닐까." 맥스무비 박혜은 편집장이 언젠가 잡지에 쓴 문장입니다. 어떤 영화를 소개하며 쓴 문장인지 잊고 말았지만 이 문장이 처음 제 가슴에 들어오던 순간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 정말 그래, 하는 공감. 왜 난 진작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야, 하는 질투. 행여 이 아름다운 문장을 잊을까 얼른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 노트에 붙여두었더랬죠.




며칠 전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서 떼어내 컴퓨터 모니터 끝에 붙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힐끔힐끔 포스트잇의 문장을 곁눈질합니다. 품과 등. 고작 1음절짜리 두 단어를 눈깔사탕처럼 입에 물고 며칠째 혀끝에서 이리저리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화 〈동경가족〉 때문입니다. 그리운 어머니의 '품'에 대한 영화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외로운 '등'에 대한 영화. 당신께서 품에 안은 '자식'과 또 당신께서 등에 짊어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이 사려깊고 웅숭깊은 드라마의 시작은 도쿄 어느 기차역입니다.

히라야마 부부가 넓은 기차역 한편에 쪼그려 앉아 있네요. 막내아들 쇼지(츠마부키 사토시 분)가 차를 끌고 마중 나온다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다는 아들은 오지 않고 별안간 딸의 전화만 걸려 옵니다. 그럼 그렇지. 쇼지가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매사에 덤벙대고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한 녀석이 지금 엉뚱한 역에 가 있답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어머니(요시유키 카즈코 분)와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아버지(하시즈메 이사오 분). 결국 두 분이 택시를 탑니다. 요금을 십만원이나 내고 겨우 큰아들 집에 도착합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죠. 의사가 된 큰아들 코이치네 식구, 미용실 하는 둘째 딸 시게코, 그리고 요즘은 또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철부지 막내아들 쇼지. 외딴 섬마을을 떠나 하나

**김세윤** 방송작가 seyooni@gmail.com

영화 보고 글 쓰는 사람. 서류 보고 용쓰는 직장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한 뼘 더 재미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기 최면에 빠져 사는, 그래봐야 오늘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둘 도쿄로 올라간 자식들입니다. 외지에서 잘 살고는 있는지, 늘 걱정하던 부모님께서 큰 맘 먹고 찾아온 도쿄입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았고 좁은 집에 사람이 북적대는 것도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하루. 연로한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게 큰아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둘째 딸 집으로 옮겨 또 며칠 묵어 보지만 먹고살기 바쁜 딸네 부부는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신경을 안 쓸 수야 없으니 그게 다 스트레스. 결국 딸이 꾀를 내죠. 좋은 구경 시켜드린다면서 두 분을 호텔로 모신 겁니다. 자식들 집에서 떠밀리듯 나와 텅 빈 호텔 방 침대에 걸터앉은 노부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두 분의 뒷모습이 참 쓸쓸하고 서글퍼 보입니다.

결국 지루함과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 만에 호텔에서 나온 두 분. 아버지는 옛 친구네 집에서 주무시겠답니다. 어머니는 분명 엉망이 되어 있을 막내아들 집도 청소해줄 겸 그 좁은 자취방에서 묵기로 했죠. 좀처럼 떨어져 지낸 적 없는 두 분이 모처럼 각자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와 회포를 풀다 대취하고 마는 아버지. 아들이 느닷없이 불러들인 여자친구 노리코(아오이 유우 분)를 소개받고 당황하는 어머니. 그렇게 비틀대고 허둥대며 저물어가는 도쿄의 또 하룻밤. 이제 날이 밝으면 뜻밖의 사건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어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사로운 라스트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경가족〉은 일본영화입니다.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대표작 〈동경이야기〉(1953)를 21세기 일본에 맞게 각색해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일본감독 야마다 요지가 연출했고 츠마부키 사토시와 아오이 유우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배경도 일본, 정서도 일본, 언어도 물론 일본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제목이 '동경가족'이지만 '서울가족'이라 이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이상한 익숙함의 까닭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다가 저는 결국 이 문장에 도달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단어가 '품'이라면 아버지의 단어는 '등'이 아닐까."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등'은 아마도 만국공통이 아닐런지요. 저의 어머니도 영화 속 어머니처럼 늘 낮고 따뜻한 품으로 절 감싸주셨죠. 저의 아버지도 영화 속 아버지처럼 항상 높고 차가운 등으로 절 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만만했고 아버지는 어색했어요. 어머니에겐 괜히 미안하고 아버지에겐 괜히 서운합니다. 영화 속 쇼지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우리 모두 꼬박꼬박 나이를 먹어갑니다. 부모님도 차곡차곡 나이를 잡수십니다. 그러다 결국, '그때'가 오고야 말죠. 늘 꼿꼿했던 아버지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달려가 안길 어머니의 품이 사라지는 때. 영화 〈동경가족〉엔 어느 가족에게나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그때'의 당혹감이 실감나게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등'을 안쓰러워하는 자식들의 회한이 눈물나게 담겨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손으로 물을 떠 올리는 행위와 같아서, 떠 올린 물에 조금이나마 진실이 담겨있기를 바라며 그린다." 야마다 요지 감독이 정성스레 떠 올린 한 가족의 일주일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맑고 투명한 진실이 담긴 영화 〈동경가족〉. 감독은 "이 작품을 오즈 야스지로 감독에게 바칩니다."라고 영화 끝에 써넣었습니다. 저는 그 밑에 한 줄 더 써넣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부모님께 바칩니다."라구요.

#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관습과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라도 서로 생각이 대치하는 사안을 만나면 사회생활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각 사회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 법률과 제도를 채택한다. 국가는 법률과 제도, 그리고 각종 부수 규정을 제정하고 사람들은 이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정부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규정의 시행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 규제는 관습문화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이끄는 틀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규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이다. 환경규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 환경을 오염하는 사람과 오염된 환경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룬다. 안전규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규제마다 그에 대한 지지자와 불만층이 있기 마련이다.

또 각 규제에는 그 시행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다. 규제담당관에게 규제의 시행은 업무의 수행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행사이기도 하다. 규제가 사라지면 규제담당관은 일거리와 권력을 모두 잃는다. 이처럼 규제의 세계에서는 이해집단과 공무원 등 여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얽혀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규제의 채택과 폐기를 다루는 정치과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이기 마련이다. 이 이해관계를 보지 못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규제를 도입할 때의 명분은 예외 없이 공익창달이다. 그리고 규제를 시행해 가다 보면 이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 자료로부터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기본 속성상 그 옳고 그름에 대해 만장일치의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규제의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반대파가 감히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해당 규제의 폐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폐기를 반대하는 측의 저항이 드셀 것이다. 자신의 업무와 권력을 지키고 싶은 규제담당관 또한 음으로 양으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도우려 하기 쉽다.

규제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려면 해당 규제의 특성과 성과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규제전문가는 검증된 분석틀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력이다. 그리고 규제담당관은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인은 얻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정보와 감각을 습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면 규제의 공익성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석전문가와 규제담당 공무원은 각각 자신의 업무를 확보하려는 사적 유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규제전문가는 부당한 규제를 많이 적발할수록 좋지만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규제는 지키고 싶다. 아무리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라 해도 그 내용이 작성자의 사적 이익에 맞도록 왜곡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일으킨다. 그러므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동원하되 먼저 이들이 사적 유인에 내둘리지 않을 여건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전문가를 선정할 때에는 이전의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규제 문제를 처리한 뒤의 실제 상황 전개가 사전 분석과 다른 일이 자주 일어나면 이 분석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추후의 규제개혁에서 배제해야 한다. 규제담당관에게는 각자 시행했던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규제의 유지와 폐기, 또는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실제 그 규제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과거 건의서를 검색해 잘못 건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탈락, 강등, 또는 퇴출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한다. 규제의 정확한 실체에 기초한 개혁이 가능해야 규제개혁은 성공한다.

나라경제 기획 2014

AUGUST

# WOMAN

## 임신 · 출산 · 육아 · 보육 · 안전 등 여성 지원정책


02 **2015년부터 여초(女超)사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에 불과**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04 **진료비부터 철분제까지, 임산부라면 신청하세요!**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06 **기형아 걱정되면 임신부 약물상담 꼭 받으세요** 한정열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센터장

07 **집으로 찾아와 1:1로 아이 돌봐…소득 따라 차등 지원**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팀장

08 **13종 국가예방접종 무료…미숙아 등 신생아 지원 다양해**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10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 둔 모든 가정에 지원** 정은혜 베이비뉴스 기자

11 **밤길 무섭다면? 귀가 도우미와 함께 들어가세요** 박소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

12 **가정폭력,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고경숙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장

13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 역량으로 연결시킨다면?!** 조정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14 **다시 일하고 싶다면? 전국 121개 '여성새일센터'로!** 서금순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15 **손님이 짜다면 짠 것** 계도원 에이프릴컨설팅그룹 대표

16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록

book in BOOK

# 2015년부터 여초(女超)사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에 불과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있었을 것 같은 옛말이 돼버린 요즘, 여성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해 2014년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통계청은 1997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7월 1일~7일)마다 부문별로 여성의 모습을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오고 있다.

## 2014 여성인구, 총인구의 50%…4가구 중 1가구 여성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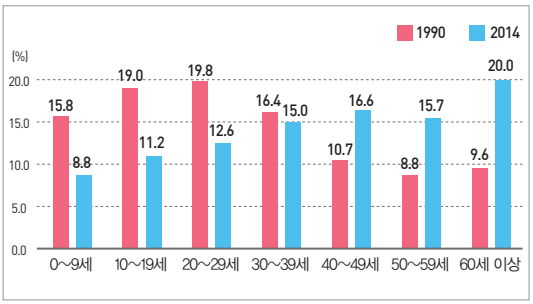
먼저, 여성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여성인구는 2,520만4천명으로 총인구의 50.0%를 차지했다. 총인구의 49.5%를 차지했던 1980년 이후 34년 만에 50.0%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남성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성 100명당 남성수를 나타내는 성비도 1980년 101.8명에서 2014년 100.1명으로 감소했다. 여성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으며, 이 연령대는 1990년 9.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인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가구주 비중도 높아졌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514만7천가구로 전체 가구(1,845만8천가구)의 27.9%를 차지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여성이 가구주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비중이 35.3%로 가장 높았고, 2030년에는 이 연령대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의 절반(48.2%)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속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70.3%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남성보다 14.2%p 높은 55.1%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장생활에선 남성이 75.1%로 여성(72.6%)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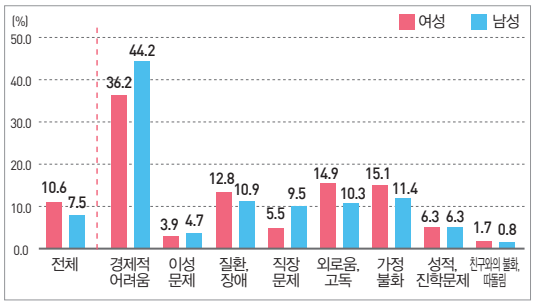
자살충동도 여성이 더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은 10.6%로 남성 7.5%보다 높았다. 기혼여성(9.3%)보다 미혼여성(13.1%)이, 50대

〈그림 1〉 연령대별 여성인구비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2

〈그림 2〉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201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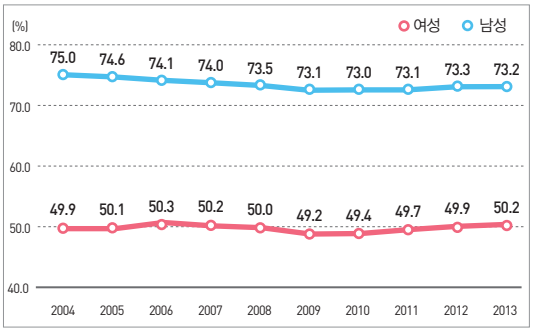
이상(8.4%)보다는 20~30대(11.8%)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6.2%), 가정불화(15.1%), 외로움 · 고독(14.9%) 순이었다.

## 여성 임금, 남성의 68.1% 수준

낮아도 한참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좀 나아졌을까?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전년(49.9%)에 비해 상승했지만, 남성(73.2%)과는 23.0%p나 차이가 났다.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4.6%로 남성(89.4%)보다 24.8%p 낮았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4.7%로 남성(71.0%)보다 높았으나, 상용직은 40.6%로 남성(51.1%)보다 낮았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3년 4월 기준 195만5천명으로 20.1%에 달했다. 여성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남성(298만6천원)의 68.1%(203만3천원)에 그쳤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다. 먼저 대학진학률은 2013년 여학생이 74.5%로 남학생(6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처음으로 남학생의 진학률을 넘어선 이후 점점 더 격차가 커져 2013년에는 7.1%p까지 벌어졌다. 여학생의 진학률은 전문대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모두 더 높았다. 각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초등학교는 교원 4명 중 3명(76.6%)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13.6%에 그쳤던 여성 의사 비율은 2013년 23.9%로 증가했으며, 공직 내 여성 공무원 비율도 4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판사 ·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1.2%로 2000년(3.1%)에 비해 18.1%p 증가했다.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표〉 공무원 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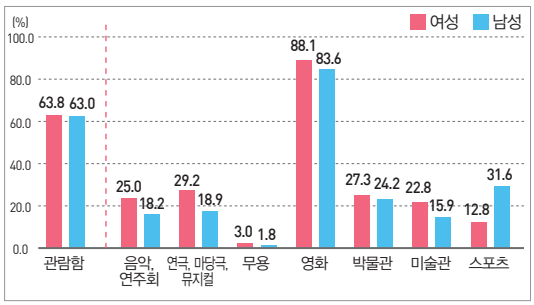
| | 5급 공채시험* | 외무고시 | 사법시험 | 7급* | 9급* |
|---|---|---|---|---|---|
| 2000 | 25.1 | 20.0 | 18.9 | 16.6 | 37.4 |
| 2005 | 44.0 | 52.6 | 32.3 | 27.7 | 44.9 |
| 2010 | 47.7 | 60.0 | 41.5 | 37.0 | 43.3 |
| 2011 | 38.8 | 55.2 | 37.3 | 37.0 | 41.1 |
| 2012 | 43.8 | 53.1 | 41.7 | 39.0 | 42.9 |
| 2013 | 46.0 | 59.5 | 40.2 | 37.5 | 42.7 |

주: *기술직 제외
자료: 안전행정부, 「안전행정 통계연보」, www.gosi.kr, 법무부, www.moj.go.kr, 각 연도

## 강력범죄 피해자 85.6%가 여성

문화예술 · 스포츠 관람은 여성이 63.8%로 남성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0.8%p로 미미했다. 가장 높은 것은 남녀 모두 영화관람(88.1%)이었으며, 그 다음 순위는 여성이 연극 · 마당극 · 뮤지컬 관람(29.2%)인 데 반해 남성은 스포츠 관람(31.6%)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문화예술 ·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여성의 안전은 더 나빠졌다. 살인 · 강도 · 방화 · 강간 등 강력범죄(흉악)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비율은 2000년 71.2%에서 2012년 85.6%로 증가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도 2013년 25만4천건으로 전년의 22만3천건에 비해 약 3만1천건 증가했다.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건수의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폭력(6.2%), 가족 문제(4.0%) 순이었다.

■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 진료비부터 철분제까지, 임산부라면 신청하세요!

##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임신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계층별 · 상황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찾아보자.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라면?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는 50만원,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했다면 7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신청하면 되고,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카드 형태가 아닌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비용이 지급된다(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급여, 비급여 모두 지원)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부담 비용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필수
- 지정요양기관 조회: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 만 18세 이하 임산부라면?

만 18세 이하 임산부에게는 '맘편한카드'를 발급해 120만원 이내에서 임신 · 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로 구비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뒤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와 입 · 퇴원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등록된 요양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자(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우리카드 02-2002-3313).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한도 없음.)
- 2014년 6월 개편내용: 자궁경부암 검진, 한방의료기관 · 보건기관 등도 이용 가능
- 지정요양기관 조회: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카드신청 시 '진료 병의원 목록' 다운 가능

### ✚ 출산한 여성 장애인이라면?

정부는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증명서, 비용신청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계좌로 입금된다.

### ✚ 가정에서 출산했다면?

병 ·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한 지 3년 이내로, 신청 당시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이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여야 한다. 단, 해외출산을 했거나 입양자녀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25만원이 지급된다(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난임부부라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라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의 문을 두드려 보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총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문의: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동결배아) 3회, 회당 6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1회라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총 3회로 제한

– 인공수정: 최대 3회,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 · 출산한 여성이라면 가까운 동네 보건소부터 찾아가자. 지역 보건소마다 지원대상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출산지원금 · 방문보건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는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제공).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도 지원한다(1인 1개월분 기준 3개월분 제공).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할 것(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는 임산부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 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지만 최저생계비 120% 이상 200% 미만 가정은 공급식품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조사 등 실시

###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라면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뿐 아니라 사산, 유산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2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 지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기형아 걱정되면 임신부 약물상담 꼭 받으세요

- 임신인지 모르고 감기약 · 피임약 등을 복용해 불안한 임신부
- 고혈압 · 뇌전증 · 우울증 등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예비임신부
- 마더세이프콜센터 무료상담서비스: ☎1588-7309(월~금, 9시~17시)

#상담사례1. 여행을 가느라 피임약 마이보라를 1주일간 복용했는데 임신이 됐네요. 기형아를 출산할까 걱정돼 부모님께 임신이라는 말씀도 못드리고 불안합니다. 아기 낳아도 될까요?

#상담사례2.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1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임신해도 될까요? 임신 중에는 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는 기형유발물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위 사례들처럼 임신 중 또는 임신 전에 복용했던 약물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상담해주는 기관이다. 임신부가 노출되는 약물 대부분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노출됐을 때 임신부가 느끼는 기형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노출된 약물로 인해 임신부들은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고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악몽을 꾸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된다. 임신인지 모르고 약물에 노출됐을 때 인공임신 중절을 선택하는 경우는 연간 4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시행한 임신부 및 예비임신부의 약물 관련 상담이 연간 6천건 이상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형발생과 관련되지 않는 약물이어서 인공임신중절이 불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가적으로 저출산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간 출산 45만건의 약 10%에 해당될 정도의 많은 임신부가 잘못된 임신중절을 선택해 국가적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인공임신중절은 출혈 · 감염 · 패혈증 등의 문제뿐 아니라 나중에 우울증 등을 동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임신부가 약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임신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초기 증상으로 입덧 · 위장장애 · 방광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고혈압 · 당뇨병 · 천식 · 뇌전증 · 우울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다. 이럴 때 최선의 방법은 계획임신을 하는 것이다. 급성 질환에 의한 약물 노출을 피할 수 있고, 만성질환의 경우 보다 안전한 약물로 바꿔 복용함으로써 안전한 임신을 준비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약물에 노출됐다면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센터는 국제적 기형유발물질서비스기관(www.mothertobaby.org)의 하나로 임신부의 약물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생식발생독성데이터베이스인 마이크로메덱스(Micromedex) 등을 활용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 자체적으로도 지난 15년 동안 마더세이프 DB에 구축한 3만건 이상의 정보를 활용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www.mothersafe.or.kr)를 통해서도 임신부나 수유부의 약물 및 유해물질정보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QnA'를 제공한다. 서울의 제일병원을 비롯해 지방의 거점지역센터로 부산일신기독병원, 전남대병원, 대전미즈여성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울산맘스여성병원이 있어 각 지역에서도 직접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정열**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센터장
hanjungyeol055@gmail.com



# 집으로 찾아와 1:1로 아이 돌봐… 소득 따라 차등 지원

-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지원 여부 파악부터
-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받는 경우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아이돌봄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일대일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자녀돌봄 시 가사활동을 추가 제공하는 종합형서비스,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전문돌봄프로그램에 따라 영아에게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서비스가 추가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및 시간은 이용자의 소득유형과 부모의 취업 여부, 정부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합형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가, 나, 다 유형, 표 참고)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100% 초과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 대상 서비스인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서비스는 100%를 초과하는 모든 대상에게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유형(가, 나, 다, 라)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부지원유형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이용자는 아이돌봄홈페이지(idolbom.mogef.go.kr)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원하는 서비스시간을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가상계좌로 선입금하면 각 지자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요청일자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준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가구나 소득기준 100% 초과 가구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곧바로 아이돌봄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표〉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기준과 비용(2014년 기준)

| | | 시간제 돌봄서비스 |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
| 소득기준 (4인 기준) | | •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월 241만원)<br>•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월 338만원)<br>•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월 483만원)<br>•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 | |
| 비용 | | 시간당 5,500원 | | 월 110만원(200시간 기준) | |
| 정부 지원금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0세아 | |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4,250원 | 1,250원 | 75만원 | 35만원 |
| | 나형 | 2,250원 | 3,250원 | 65만원 | 45만원 |
| | 다형 | 1,250원 | 4,250원 | 55만원 | 55만원 |
| | 라형 | – | 5,500원 | 45만원 | 65만원 |

주: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1세아는 정부지원금이 0세아에 비해 각 유형에서 5만원씩 줄어듦.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합형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서비스는 1일 최소 6시간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팀장
ymha@familynet.or.kr



# 13종 국가예방접종 무료… 미숙아 등 신생아 지원 다양해

'건강하게 출산해 튼튼하게 키우자.'는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정부의 다양한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생아부터 영유아,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정부의 건강관리 지원정책을 모아봤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모든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6종 무료 검사
- 만 18세까지 의료비, 특수 조제분유 등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특정효소의 결핍으로 그 효소에 의해 대사돼야 될 물질이 그대로 신체에 축적되고, 그 축적물에 의해 인체에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 ·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선천성대사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患兒)의 경우 평생 특수 조제된 분유나 저단백식품(햇반)만 먹어야 한다.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경우 월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 등을 만 18세까지 지원해준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전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환아 관리: 의료비,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
-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최고 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725만4천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가 지원대상이다.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 시 체중이 2.5~2.0kg이면 500만원, 2.0~1.5kg이면 700만원, 1.5kg 미만인 경우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신생아가 대상이다. 퇴원일 기준으로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해준다. 단, 셋째아 이상이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일 때(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지원범위 및 내용**
  - 미숙아
    -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신생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만(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료는 제외)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지원(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1.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80% 추가 지원

2. 본인부담금이 500만원 초과 시엔 500만원까지 상기 기준 적용.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90%를 적용 지원(최고 500만원)

•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지원

• 검진주기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이며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 비용을 지원한다. 검진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주기에 맞춰 검진안내서와 건강검진표를 송부해주므로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가정(2013년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6만8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5만4천원 이하)의 영유아에겐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도 지원한다.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 **지원내용**: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 **검진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 · 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 · 체중 · 두위),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

• **검진주기**: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어린이, 13종 국가예방접종 무료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접종 가능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13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사이트(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이나 초 · 중학교 입학 시 필요한데, 자녀의 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또는 앱)에서 확인될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13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전액

• **지원백신**: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Hib(b형 헤모필루수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 폐렴구균

• **문의**: 주소지 보건소, 질병관리본부(043-719-737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 둔 모든 가정에 지원

지난해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부모이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12개월 미만) 월 39만4천원, 만 1세 월 34만7천원, 만 2세 월 28만6천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이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장애아동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는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총 3곳이다. 카드사마다 아이사랑카드 사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이미 KB국민, 하나SK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전환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즐거운카드' 신청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이를 둔 부모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지원된 금액은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이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25일경 직접 부모의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준다. 양육수당은 보육료 ·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 ✚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료 ·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유아학비도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신청하자.

**정은혜**
베이비뉴스 기자
econo3@nate.com



# 밤길 무섭다면? 귀가 도우미와 함께 들어가세요

- 택시번호와 승 · 하차시간 전송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여성가구는 월 9,900원에 홈 안심 서비스
- 등록된 지인에게 위기상황 알려주는 스마트폰 무료 앱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최근 몇 년간 여성안전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늦은 밤 귀갓길에 집중해 발생하는 데다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등으로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여성안전종합대책'도 여성의 '밤길 안심귀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4월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500명의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가 활동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해 2인 1조 스카우트 이름과 정보를 확인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해당 스카우트를 만나 함께 귀가하면 된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사용자가 회원등록을 하고 택시 승차 시 카드로 선승인을 해놓으면 지정해둔 휴대전화 번호로 택시번호와 탑승 · 하차시간이 전송된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놓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는 여성가구에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해 경비업체 관제실에서 24시간 신호를 감지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서비스다. 경찰청이 에스원, 케이티텔레캅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제공하고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혹은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정으로 서울시 ·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전월세 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세대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준비한 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배너를 클릭해 신청란에 업로드하면 된다.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무료 앱도 활용하면 좋다. '안전 Dream'은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내 주변 생활안전시설 위치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성폭력 목격 시 사진을 찍어 바로 제보할 수 있다.

'여성아동용 112 긴급신고앱'은 납치 · 감금 등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앱이다. 긴급신고 시 위치서비스를 켜두면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으며, 평소 사용자 정보란에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두면 더욱 좋다. 야간 귀갓길 등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으로 가장해 범죄를 예방하는 'fake call' 기능도 있다.

안전행정부의 '스마트 안전귀가'는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위치기반 개인화서비스다. 목적지와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본인의 이동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되며 구역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 주의 구역 출입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가족 안전콜'은 여성이나 아이, 노약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위험을 느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위급 · 긴급 호출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면 사전에 등록한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발신으로 나의 위급상황을 알려준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무료 앱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종합해 전체 여성안전대책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홍보가 부족하고 '안심귀가' 이름을 지닌 비슷한 서비스가 난립해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데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다. 결국 서비스의 실효성은 실제 여성들이 이를 얼마나 알고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박소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
soyunp@mt.co.kr



# 가정폭력,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 원스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임시보호소에서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 긴급출동 · 구조(112 · 119), 법률, 의료, 교육 등도 지원

최근 들어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원스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전화하면 초기상담을 통해 긴급구조 · 보호가 이뤄지며 법률 · 의료 · 보호시설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 상담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센터), 원스톱지원센터의 24시간 위기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낮 시간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화와 면접을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긴급구조 · 보호

1366센터,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하거나 112 · 119에 직접 구조를 요청하면 피해자와 동반자녀는 가해자와 분리돼 긴급피난처에서 3일(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 가사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료지원

1366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및 동반자녀는 무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해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엔 상담 후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상담소나 보호시설, 시 · 군 · 구청에 청구할 수 있다.

### 보호시설 입소

단기시설은 6개월(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시설은 2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1366센터나 상담소에서 상담 후 입소 가능하다.

### 주거지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월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금전 또는 현물)을 받을 수 있으며, 시 · 군 ·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비밀전학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 주민등록 등 · 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 판결문 중 하나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경숙**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장
khl0925@daum.net



#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 역량으로 연결시킨다면?!

- 이것저것 배우는 것은 취미일 뿐! 중장기 전략 세우기
-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과 정책 적극 활용하기
-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로 경력개발에 '날개' 달기

대한민국이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국가적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2008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130여개가 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돼 있고, 앞으로도 더 세울 태세다. 17년 전 정책에 처음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도입해 도의회 의원들에게 '이혼율 증가시키려고 그러느냐.', '현모양처 교육이 더 중요하니 직업훈련은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기관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있는 필자로서는 감개 무량할 따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한 모습이다. 주부들은 여전히 자신감 부족으로 사회 진출에 대해 망설이다 못해 두려워하곤 하며, 젊은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함께 고구마 줄기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한다.

가장 먼저 능력개발에도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배우는 것은 취미일 뿐이다. 자신의 목표와 장단점을 파악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보기를 권한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과 정책을 적극 활용해 보자. 앞에서 소개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여성기관, 평생학습기관, 고용노동부의 계좌제를 이용한 훈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여성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전문성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자기에게 적합한 과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창업이나 부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여성들의 창업은 많은 부분이 '창업보육센터'의 틀보다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 그곳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뿐 아니라 자금대출, 상담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기업 공익재단에서도 여성창업공모전을 통해 창업자금을 상금으로 지원하기도 하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여성은 준비해볼 일이다.

가정에 묶여 있어 이도저도 다 어렵다면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만을 위한 경력개발센터다. 173개 여성친화 직업별, 43개 창업 분야에 대해 자신의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온라인커리어코치가 배정돼 취업 시까지 각종 교육, 취업정보와 이력서 코칭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모바일 학습도 가능하다. 원하는 직업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알맞은 직업도 추천하고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꿈날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으로 유엔공공행정상, 국제이러닝시스템 대상(IMS) 등을 수상한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서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량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다. 육아에서 나온 섬세함과 책임감은 그대로 사회가 선호하는 업무에 대한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결될 수 있다. 엄마이자 아내, 딸로 살아온 경험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다. 여성들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해보자. 발품이 어렵다면 손품이라도 재빨리~! 이것은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특권이다.

**조정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choja@gg.go.kr



# 다시 일하고 싶다면? 전국 121개 '여성새일센터'로!

- 경력단절 여성에게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서류 컨설팅 및 동행면접 등 맞춤형 알선
- 구인수요를 반영한 무료 직업교육 실시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난 7월 3일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OECD 평균 62.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가사와 육아 등의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실제 재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극심한 구직난과 기대와 맞지 않는 근로조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대전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12년 대전광역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9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121개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e새일 시스템: saeil.mogef.go.kr).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대전새일센터, www.djjob1.or.kr)는 2009년 2월 개소해 매년 1천여명 이상의 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원스톱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취업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와 같은 전문적 직업상담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의욕은 물론이고 자신감도 낮아진 경우가 많아 이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적성파악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대전새일센터에서는 매년 220명이 진로를 설계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둘째, 직무소양교육, 직업의식교육을 포함한 직업전문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의 채용수요 및 구직여성의 선호를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의 취업인프라를 구축, 적극적인 취업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전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유휴보육교사 재취업사업, 진로체험지원단 양성과정, 철판요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 중이다.

셋째, 여성인턴제도와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취업설계사를 배치해 구인기업을 찾고, 구직여성이 희망할 경우 함께 면접에 동행해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기업의 채용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인 인턴제를 통해 취업 후 직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구인기업도 지원한다. 2014년 현재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해 80명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한 여성의 정착을 돕는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는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대한 것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보육지원, 직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잡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등을 주관해 지역사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새일센터를 비롯해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금순**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djjob1@hanmail.net



# 손님이 짜다면 짠 것

- '제품+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승부 걸어야
- 창업 규모는 투자비, 창업 후 6개월간 운영비 등을 고려
- 고객 불평은 선물로 여기고 블로그나 SNS 적극 활용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성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세계 최고 영업사원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The Mind of the Customer」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제품이나 기술 우수성보다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 역시 "토마토를 자를 수 있다면 밥집을 할 수 있고, 병뚜껑을 딸 수 있으면 술집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제품보다 고객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삶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예언자 칼릴지브란은 일에 대해 "사랑으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힌다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라."는 말로 창업자들의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창업의 첫 번째 성공 열쇠는 고객서비스 마인드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취미활동에 불과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식당에 붙여 놓은 "손님이 짜다면 짠 것이다."라는 표어는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제품+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싸게 팔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은 단지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한다. 고객 입장에서 가치는 고객이 얻는 총혜택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총비용을 뺀 것인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 · 서비스 · 브랜드 · 이모션 가치를 크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선호하고 사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순수추천지수(NPS; Net Promoter Score)가 60 이상 되도록 한다. 개업한 후 처음부터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는 드물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한 번 왔던 손님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왔던 손님이 다시 오기만 하면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선 손님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야 하는데 이를 점수화한 것이 순수추천지수다. 이는 적극적인 추천의향을 지닌 충성고객의 비율에서 추천이 적극적이지 않은 고객비율을 뺀 것으로, 60 이상을 얻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고객이 80% 이상이고 추천하지 않는 고객이 20% 이하여야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의 NPS는 지난해 평균 39.9였다.

네 번째, 창업 규모는 투자비, 창업 후 6개월간 운영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하며, 초기 투자금이 회수되는 손익분기점은 1년 내외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고객 불평을 '선물'로 여겨야 한다. 불평하지 않는 고객의 이탈률은 불평한 고객 이탈률의 39배나 된다. 불평은 고객들이 불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불평 고객을 단골로 삼을 수 있는 선물공식은 먼저, 감사를 표하고 불평 의견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수를 신속히 바로잡는다. 끝으로,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여섯 번째, 온라인에서 사업내용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블로그나 SNS를 적극 활용하고, 고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성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한다.

**계도원**
에이프릴컨설팅그룹 대표
kdw9763@naver.com





## 유용한 웹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공공포털사이트, 각종 복지정책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긴급복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위기대응 상담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momplus.mw.go.kr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영유아건강 등 지원정책 안내

### 보육 · 육아 지원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임신 · 출산 · 육아정보, 상담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육아 · 어린이집 정보, 아이사랑카드 안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idolbom.mogef.go.kr
아이돌봄 사업소개, 서비스 이용안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센터 현황 안내, 보육 · 육아정보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
www.childschool.moe.go.kr
육아교육포털, 유치원 학비지원, 아이즐거운카드,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안내

### 취업 · 창업 · 여성기업 지원

여성가족부 새일시스템(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전국 센터 검색, 교육훈련 현황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여성 창업지원 정책 안내, 여성기업 정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wesc.wbiz.or.kr
여성창업 지원, 센터대관 신청, 지역센터 소식

위민넷 www.women.go.kr
코칭, 취업정보, 온라인강의, 여성지원서비스

### 임신 · 출산 · 영유아건강 지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www.mothersafe.or.kr
임신 및 모유수유 중 약물정보, 계획임신 등 상담

엄마젖 최고 www.mom-baby.org
모유정보 및 상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 서비스 소개, 서비스 이용 · 납부 · 환급내역 등 개인별 조회 및 관리

마더하세요 캠페인 블로그
blog.naver.com/motherplus
보건복지부 캠페인 블로그, 정책 및 임신, 출산, 맞벌이 부부 지원 정보 소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예방접종 내역조회 및 일정관리 서비스, 관련 정보

### 여성안전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www.womenhotline.or.kr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및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소개

경찰청 안전 Dream
www.safe182.go.kr
아동 · 여성 · 장애인 대상 경찰지원센터 소개, 생활안전 지도, 법령 및 기관정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www.womannchild.or.kr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 · 여성센터 소개

###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센터 안내 및 프로그램 정보, 가족교육 및 상담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보건소 진료예약, 제증명 발급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성인 · 청소년 · 소아건강 정보, 요양기관 현황 안내

위드맘 withmom.mogef.go.kr
한부모가족 지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아이사랑보육포털

어린이집 찾기, 보육료 모바일 결제, 보육 관련 온라인 상담 서비스, 다양한 육아정보와 보육행사 및 정책정보 제공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기록 조회, 모바일 아기수첩, 예방접종 알람 서비스, 필수 예방접종 및 기타 예방접종 스케줄 안내,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정보 등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육아정보

임신 · 출산 · 육아정보,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

## 지원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 고운맘카드



임신 ·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 비용 등을 지원, 1회 임신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우체국 www.epostbank.go.kr
국민카드 kbcard.com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아이사랑카드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비용 지원. 부모 소득 무관, 지원 단가는 연령별로 다름.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 나라경제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앱스토어에서 나라경제를 검색한다 → 앱을 다운받는다 → 즐긴다



admissions.kdischool.ac.kr

# KDI국제정책대학원

##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를 대표하는 정책대학원으로 인증 획득

NASPAA ACCREDITED
The Commission on Peer Review & Accreditation

KDI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석사과정(MPP)
NASPAA(전미행정대학원연합회) 국제인증
미국외 국가 **세계 최초 획득**

NASPAA 인증은 공공행정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입니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5봄학기 학생모집안내

**모집분야** 석사과정 : 정책학, 개발정책학, 공공관리학*
박사과정 : 정책학

**교육형태** 주간전일제, 주말·야간과정

**모집일정** 원서접수 : 2014년 8월말 ~ 10월 24일(금)까지
입학설명회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시 30분
장소 : KDI대학원 서울캠퍼스 7층

* 공공관리학과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승인절차 진행중

**문의** Tel : 02-3299-1263 /1220
Email : admissions@kdischool.ac.kr

**홈페이지** www.kdischool.ac.kr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